

학생청소년일꾼들과 함께하는
2005년 운동 전망과 과제

일시 : 2005년 3월12일(토)

장소 : 전교조 본부

학생청소년네트워크

■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2005년 사업계획 ■

희망은 청소년 주체적 활동을 지지 지원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여론화하는데 앞장서는 청소년 전문단체입니다.

청소년단체 희망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활동을 펼쳐가는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활동의 장'입니다. 학생회 임원들, 동아리 회원들, 희망의 학교 지부 '희망대'에서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자치활동>을 활성화하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이 희망의 주된 활동입니다.

1. 청소년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학생회, 동아리, 학교지부 사업을 보다 전문화 한다.

1) 학생회지원사업팀

- 학생회를 진정한 학생의 대표체로 만들어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지지·지원하는 학생회 전문사업단입니다.
- 중, 고등학교 학생회 간부들의 막막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 여러 가지 교육과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학생회의 지위를 높이고, 자치활동이 잘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① 교내간부 수련회 사업 (1학기, 2학기) 2004년 40개교, 2-3000여명 학생 교육 실시

- 학생회 간부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영상물을 이용하여 쉽게 알려주고 학생회 간부로서 긍지를 갖게 합니다.
- 내용 : 진정한 학생회란? (학생회에 대한 오해와 편견 깨기), 학생회 간부의 자세, 마음가짐, 타 학교 학생회 간부사례 엿보기, 이런 축제를 만들자!

② 학생회 사이트 운영 www.stu21.net

- 600여종의 자료검색 및 학생회 온라인 상담사업 실시
- 학교행사 (입학식, 신입생환영회, 스승의날, 체육대회, 간부수련회, 선거, 수능응원)
- 일상활동 (학생회사례, 캠페인, 학생회계획) 학생회운영 (학생회운영, 대면식, 학생회MT)

③ 학생회활동모범사례창출(축제사례, 학생의 날 기념행사 사례)

- 축제 사례 (축제기획, 강당공연, 대동제 등)
- 11월 3일 학생의 날 기념행사(강당기념행사, 역사영상물 상영, 기념버튼달기운동)

④ 청소년 자치 조직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 사업을 통해 학생회 활동을 지원·육성합니다.

⑤ 학생회 연구 사업

- 학생회론 : 학생회의 정의, 학생회 역사, 학생회의 역할, 학생회 일상 활동, 1년 나기, 학생회 간부 자세, 학생회 문제점 및 대안 등
- 축 제 : 중, 고등학교 축제 전체 구성, 축제의 문제점, 축제준비에서 어려워 하는 점, 축제 문화, 대안의 축제 프로그램, 축제 정보 및 자료 등
- 회의진행법 : 학급회의, 대의원회의, 학생회운영위 회의 집중 연구, 회의진행의 문제점, 어려운 점, 사례연구, 참관 활동, 대안 연구 등
- 영상물·자료집 제작 (11월 3일 학생의 날 기념행사, 교내 축제, 학생회론)

2) 동아리지원사업팀

- 교내 풍물, 도서 동아리 연합사업을 통해 교류·연대 활동을 합니다.
-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동아리 활동의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 청소년 영상집단, 청소년연극단 사업을 통하여 청소년 문화에 영향을 줍니다.

① 풍물동아리

- 풍물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길거리 공연 기획
4월 '벚꽃놀이풍물제' (여의도 윤중로)
9월 ~ 10월 '길거리풍물제' (명동, 대학로, 신촌, 용산역광장)
- 풍물동아리의 교류·연대의 장 형성
길거리 공연 이후 풍물동아리연합을 구성한다.
- 인터넷 사업(카페, 클럽 등)을 한다.

② 도서동아리

- 봄(4월),가을(11월)에 책심기 사업
도시에 책 심기라는 주제로 도서 동아리의 요구와 메시지를 담아서 퍼포먼스와 책을 나눠 주는 행사이며,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도서문화를 정착시킨다.
- 도서동아리 LT
30여개 도서반 운영진들과 단합을 위한 LT
- 좋은 교양도서를 구비하는 사업을 벌여내어 일반청소년들이 좋은 책을 읽을 수 있게 한다.

③ 동아리 활동 교육실시

- 1년 사업에 대한 전반적 내용 (신입생 모집 및 홍보, 신입생 환영회, 대면식, 축제)
- 동아리 선후배관계 개선의 문제 및 공동체를 위한 교육

- 축제 관련 내용 (축제홍보, 축제이벤트, 축제 진행 등)

④ 청소년 영상, 연극 전문집단구성

- 청소년 영상단을 모집 및 결성한다.
영상세대에 걸 맞는 청소년 영상물을 제작·배포하여 청소년 미디어 활동의 모범 제시
인권 영화제, 국제청소년 영화제 및 각종영화제 출품
- 청소년 연극단을 모집 및 결성한다.
청소년들의 현실을 주제로 한 청소년 창작 연극단 활동 제시
각종 청소년 연극제에 참여하여 새로운 청소년 연극 상연

3) 학교지부사업팀 「희망CA」

- 희망CA는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고 실현하는 수업을 만들어 갑니다.
- 청소년 시기에 꼭 필요하지만 학교 수업시간에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사회를 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의 인권, 통일, 성, 방송연예, 아르바이트, 교육 문제)
- 희망 CA는 무기력하고 자신감 없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집단 상담 및 가치관 교육, 토론 수업을 통해 일상에 활력을 갖고 자신감을 찾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① 희망 CA 프로그램 소개

- 10대를 지배하는 방송연예, 그 이면의 이야기
스타시스템부터 팬클럽 문화까지, 대중문화 본 모습 바로알기
- 통일 내 안에 너 있다
통일이 되면 등록금이 공짜라구? 북한 청소년도 MSN을 할까?
- 발칙한 성, 여고생의 S 다이어리
궁금하지만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녀들의 이야기
- 대한민국 교육 할말은 하자!
입시 교육, 두발규제, 용의복장 숨겨진 진실
- 알바완전정복!
알바생에게도 권리가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때인 알바비 되찾기
- 활력충진 학교밖 프로그램
스포츠클라이밍, 하이킹, 덕수궁, 서대문형무소 탐방 등 체험활동

② 연대활동 프로그램

4월 농촌봉사 활동, 11월 학생의 날 기념행사, 연말 힘다지기 전체 대면식

2. 청소년 권익신장 활동을 추진한다.

1) 교육위원회

- 야자보충수업 반대, 고교등급제 등 교육제도와 입시위주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 신설
- 청소년 모임 『더하기』와 함께 청소년 목소리를 모아내는 활동 개최
- 입시로 인한 청소년 인권 실태 포럼, 토론회개최, 캠페인 실시, 수능반대페스티벌 개최

2) 통일위원회

-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적 내용을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통일 숙제 도우미 인터넷 사이트의 제작(인터넷 웹진 1318바이러스)
- 청소년 통일행사 실시 (백일장, 통일캐릭터 만들기사업, 8.15통일행사 등)

3) 용의복장규정위원회

- 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용의복장규정운동
- 용의복장규정을 위한 워크샵 개최, 용의복장규정자료집 제작
- 함께할 청소년모임 홍보 및 모집

4) 학생회 법제화 위원회

- 2004년 학생회 법제화 운동을 이어 지속적 활동 보장
- 학생회 법제화 운동을 펼쳐갈 워크샵 및 자료화 사업 실시
- 학생회 법제화 운동 청소년 모임 결성

5) 18세 정치참여 위원회

- 2004년 기자회견, 일산 라페스타 문화축제, 포럼, 국회의원 서명운동 등 18세 선거권 확대를 위한 연대활동 추진

3. 기타사업

1) 사단법인 청소년 전문단체가 되기 위한 체제정비 및 물적토대확보

- 정기이사회 개최 및 안정화
- 사단법인 희망의 지지자 및 후원회원 배가운동을 통해 재정 확보

2) 청소년 활력프로젝트

- 여름방학 서울·경기지역 청소년 500명 청소년 문화프로젝트 개최
- 문화프로젝트(연극, 춤, 노래, 애니메이션, 풍물), 미디어프로젝트(영화, 신문기자, 방송,

디카), 축제 프로젝트(축제 공연기획, 축제이벤트, 축제대동제, 축제홍보) 인문학프로젝트(역사, 토론, 권리찾기, 도서동아리)

3) 고3을 위한 새길찾기 사업

- 수능을 마친 후 학생들을 위한 교양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개최

■ 내일청소년생활문화마당 2005년 사업계획 ■

학교의 주인, 통일시대의 주역 청소년과 함께
지나온 10년의 역사를 딛고 새로운 10년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

1. 청소년 영역의 시민운동 개척

1) 청소년 정책 감시 및 정책 참여활동

- 지자체 청소년 정책 분석 및 평가
 -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분석과 인천지역 2005년 청소년 정책 분석
 - 지자체 청소년 정책에 대한 평가 분석
- 인천지역 청소년 정책의 대안적 의제 발굴사업
 - 정책 모니터링, 평가 및 감시를 통한 의제 발굴
 - 청소년 정책 참여
 - 여론수렴
- 전문위원회 신설
 - 청소년 관련 교육, 문화, 예술 정책분야 전문위원회 활동을 통한 전문성 확보

2) 청소년의 정책 참여활동 강화

- 청소년 관련 현안 대응 (단기적)
 -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
 - 상급 교사의 전문 역량 강화 (보도자료, 예산 정책분석 등 실무력 훈련)
- 지속적인 청소년 인권 활동 (중장기적)
 - 청소년 인권관련 지속적인 기획활동 진행 (여성, 장애청소년, 실업계, 근로)
 - 청소년 인권 문제 등 학교 안팎 인권실태 조사 및 여론화 사업)
- 단체 내 [청소년정치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참정권 및 단체의 정치 참여활동 제고
 - 18세 선거권, 주요정치현안에 청소년 단체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
 - 청소년 정책참여에 대한 지원활동 (청소년위원회 운영 모델화 사업 전개)

2. 2005년 중점 사업

1) 회원조직화 사업

- 영상패 연합 활동
 - 연합 간부 훈련프로그램과 인권영화제 개최
 - 영상아카데미 개최
- 청소년회 활동
 - 인권교실, 청소년인권 STEP BY STEP 프로젝트(청소년 인권의회 활동)활동
- 동문회원 사업
 - 후원회, 자원봉사, 일꾼 모임, 소모임 활동전개

2) 청소년 인권 STEP BY STEP 프로젝트 (청소년인권의회 활동)

- 목표> 청소년이 중심이되는 정책참여 활동 실현
청소년 인권단체로서의 정체성 확보 및 회원조직화 사업전개
- 시기> 2005년 3월 -11월 3일(학생의 날)
- 대상> 중, 고생 (학생회, 자치위원회, 동아리 연합 등 50명)
- 내용>
 - 1) 인권의회 구성 (의원 선출, 분야별 위원회 구성)
 - 2) 분야별 의회 위원회 활동
 - 3) 의회개원 (교육, 지자체 관계자 참여)
 - 4) 인권영화축제 (학생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 인권상 시상)

3) 청소년 통일 회의 활동

- 목표> 청소년을 중심으로한 자주교류 성사
청소년 통일운동의 정형 창출
- 시기> 2005년 3월 -8월 15일
- 대상> 중,고생
- 내용>
 - 1) 전국청소년단체연대회의, 우리겨레하나되기 인천본부, 교육연구소 연계콘소시엄 기획
 - 2) 통일캠페인 및 회의 활동
 - 3) 방북(금강산) 및 통일캠프 진행

4) 월례 강좌 개설

- 목표> 청소년 정치참여 활동 확대 및 교육기회 부여
- 대상> 청소년, 동문회원 및 일꾼
- 시기> 연중 매월 진행
- 내용>
 - 1) 일꾼을 중심으로 동문회 사업 진행
 - 2) 정치활동 위원회 활동에 대한 교육지원 활동
 - 3) 인권, 통일, 청소년 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시행

3. 월별 주요사업

월	사업명	비고
1월	예비일꾼교육	일꾼 발굴 및 교육
	청소년인권교실	전교조 연계
	영상패연합 간부 WORK-SHOP	간부교육 팀웍 형성
2월	총회	사업결산 및 계획수립
	전국청소년단체 일꾼수련회	전국 공동사업 토론
3월	청소년(통일,인권)의회 의원단 모집	2005년 중점사업
	각 학교 전교조 중등 분회 방문	후원모집 및 사업설명
	영상패 연합 총회	임원 구성 및 사업계획
4월	인권, 통일의원단 교육	2005년 중점사업
5월	인권, 통일의회 의원단 활동	2005년 중점사업
6월	청소년통일회의 토론 및 기자회견	전국 집중
7월	청소년 역사기행 (고구려유적)	어려운 청소년대상(안)
8월	통일 순례 및 청소년통일캠프(금강산)	청소년 남북 자주교류 제안
9월	청소년 동아리 대축제 '비상'	인천청소년단체협의회 참여
11월	학생의 날 기념 행사 및 청소년인권 영화제	인권상시상, 영화제 시상 학생의날 축제 진행
	고3 진로 탐색 교실	NGO 연계 활동
12월	송년회	회원 단합 행사

■ 청소년위원회(준) 2005년 사업계획 ■

1. 사업방향

2005년은 청소년위원회 준비위를 마감하고 시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민주노동당의 청소년부문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본 조직을 건설한다.

청소년위원회 본 조직 건설은 청소년의 현실을 바꾸는 제도개선운동에 당이 앞장서는 과정이며 청소년들에게 당을 알리고 지지를 획득해가는 과정이다. 또한 당 내에서 청년학생청소년위원회의 생신한 활동정형을 통해 당의 젊은 활력을 만든다.

2. 사업목표

- (1) 청소년위원회 역량을 확대 강화하고 청년학생청소년위의 연대를 통해서 당 내에 청소년위원회에 대한 위상을 높인다.
- (2) 적극적인 투쟁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현실을 바꾸고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위한 제도개선운동을 벌인다.
- (3) 청소년에게 민주노동당을 알리고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
- (4) 청소년의 의견을 일상적으로 파악하고 청소년위원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한다.

3. 세부 사업계획

1) 준비위원회의 조직역량을 강화 · 확대한다.

(1) 준비위원회의 활동역량 확대 강화

- ① 현재 준비위원 중 활동정지위원 정리 및 임기
 - 2기 준비위원 : 1기 준비위원 중 실질활동가로 정리 + 새 준비위원
 - 준비위원 임기 및 선임방법 : 임기 1년(재선임가능)
- ② 준비위원 확대 : 당원 중 청소년위원회 사업과 연계성이 큰 당원들을 적극 영입한다.
18세 선거권 운동 / 학생회 법제화운동 / 노동인권 / 인터넷 활동 / 청소년단체 /

(2) 시도위원회 건설

- ① 준비위원 및 당원 중 청소년활동 관련자 조직을 위한 "청소년위원회 수련회"
- ② 청년, 학생위와 연계하여 지역 간담회 및 시도당 준비위원회 구성
- ③ 청년, 학생위와 연계하여 지구당 및 시도당의 청소년사업정형 보급

(3) 청소년단체 및 진보적 청소년들과의 연대 강화

- ① 현재 참가하고 있는 학생, 청소년운동 네트워크를 확대 발전시켜 서울, 경인지역의 활동가들과 일상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② 학생회 법제화 운동본부 확대

(4) 1318청소년당원을 확대한다.

- ①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만난 1318청소년들을 적극 당우로 가입시킨다.
- ② 당규개정을 통해 1318당원들의 당비를 낮춘다.

2) 적극적인 투쟁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현실을 바꾸고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운동을 벌인다.

(1) 학생회 법제화

- ① 내용 : 학교 내에서 학생 청소년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은 법적으로 학생회를 학생의 대표기구로 인정하는 것이다. 2004년 최순영 의원이 초중등교육법개정안에 학생회법제화를 포함시키면서 청소년위원회가 제기해 만들어진 '학생회 법제화 운동본부(준)'의 성과를 이어 2005년에는 이 운동을 대중화하고 적극 선전·홍보하여 활발한 운동으로 벌여낸다.

② 투쟁일정

- 2월-8월 : 학생회 법제화 운동본부(준) 조직 확대 및 강화 / 전국 학생회 간부 간단회 개최 / 올바른 학생회 법제화 방안 연구 / 운동본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인터넷 투쟁 및 조직 / 꾸준한 서명운동 개최 / 선전 자료를 발행하여 정기적인 선전, 홍보 활동
- 9월 : 국정감사 기간, 학생회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등 조사 / 국회 교육위 위원과 공청회 등
- 10, 11, 12월 : 국회 심의 기간, 그간의 모든 역량을 모아 총 집결 투쟁, 여론 형성 / 학생회 법제화를 위한 전국 학생회 간부 1만인 선언, 기자회견, 거리 선전전, 페스티벌 등 다양한 형식

(2) 18세 선거권 인하

- ① 내용 : 18세 선거권 낮추기 공동연대와 보조를 맞추어 적극적으로 선거권 인하 운동을 펼친다. 더 나아가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청소년의 정치참여, 사회 참여를 공론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한다.

(3)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운동

- ① 내용 :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불리고 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와 실업계고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 및 제도 개선 운동을 벌인다.
실업계고 현장실습 현황 파악(면접 조사 및 통계) / 청소년 노동인권 연구집 발간 /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 및 사이트 제작

(4) 사회적 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과 주장을 적극 알린다.

- ① 국가보안법 폐지, 전쟁반대, 비정규직투쟁, 사립학교법 투쟁, 통일운동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에 청소년의 의견과 주장을 적극 표현한다.

3) 청소년에게 민주노동당을 알리고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

(1) 3회 민주노동당 청소년 정치캠프 “정치야, 놀자”

- ① 기간 : 2005년 8월 3일~5일(2박3일) 총 50여명
- ② 목표 : 미래의 주인이 아닌 현재의 주인이며, 진보 정치의 새로운 희망으로 인정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진보정치와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장을 민주노동당이 제공한다.
작년의 평가를 통해 기간을 늘리고,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등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장을 더욱더 확대한다.
- ③ 내용 : 청소년이 논하는 대한민국 국회 / 청소년이 바라는것! 우리도 할말은 하자! - 끝장토론 / 교육위원 최순영 의원님과 함께 하는 국회견학 / 우정과 연대의 밤 / 나를 알자! 세상을 느끼자! 이슈 포럼

(2) 2회 민주노동당 청소년 아카데미 “청소년의 세상읽기”

- ① 기간 : 2006년 1월 초, 총 3강, 총 300명
- ② 목표 : 수능이 끝난 고3 수험생이나 겨울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에게 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저명한 인사들과 함께 강의뿐만 아니라 주제별 토론이나 포럼 등 다양한 형식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주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만든다.
[강의]홍세화의 학벌 없는 사회를 꿈꾸며 / 한비야의 세계분쟁지역을 찾아서 / 권영길의원과 함께하는 진보정치의 역사 등
[청소년 이슈 포럼] 올해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활동가들과 함께하는 청소년 이슈 포럼
[나의 주장 발표대회] 청소년이 생각하는 사회 현실,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자!

(3) 민주노동당과 함께하는 정치체험교육프로그램(견학)

- ① 기간 : 2005년 4월 ~ 6월, 월 2회 토요일 예정, 총 6회
- ② 목표 : 학교에서의 NGO반이나 정치연구반, 학생회 등 정치와 사회에 관심 있는 CA나 동아리에 대해 진정한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해 알려주고, 민주노동당을 소개한다.
- ③ 내용 : 정치란 무엇인가(단어게임) / 진보정치의 역사(영상) / 흥미진진한 정치이야기(강의)/ 민주노동당 소개 / 국회의사당 견학

(4) 청소년을 위한 민주노동당 홍보 매뉴얼 제작

작년 하반기에만 당을 견학하거나 당 행사를 다녀간 청소년이 약 500명이다. 미래의 당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청소년에게 당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매뉴얼이 필요하다.
진보정당의 역사 / 당 소개 / 청소년위원회 소개 / 민주노동당 교육, 청소년 정책 / 청소년의 사회적 보장을 위한 민주노동당 제안 BEST10 / 당 가입서

(5) 학생의 날

- ① 기간 : 2005년 11월 3일
- ② 목표 : 1929년 광우학생독립운동에서 일제에 항거한 자주적인 학생들의 정신을 기리고, 오늘날 학생의 날의 의미를 되짚어본다.

- ③ 내용 : 학생의 날을 기념하여 민주노동당이 청소년 활동가들, 학생회 임원들, 진보적 청소년들을 모아 그 뜻을 기리는 기념식과 기념공연을 한다.

(6) 홈페이지 제작

- ① 기간 : 2005년 2월 ~ 3월
- ② 목표 : 지방 청소년당원이나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활동가 등을 당 중심으로 묶어세우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를 제작한다.
- ③ 내용 : 인터넷 잡지 기능 / 게시판 기능 / 카페 기능 / 블로그 기능 등

4) 청소년의 의견을 일상적으로 파악하고 청소년위원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한다.

(1) 여론파악-설문조사

- ① 청소년 교육문제 및 시사일반, 사안별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의견청취

(2) 정기적 연수

- ① 교육제도 및 청소년 정책에 대한 준비위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대안을 마련을 위한 정기 세미나 및 워크샵
- ② 3분정책 / 문광부의 3차 청소년육성계획 분석 / 청소년위원회 부처신설 등등

(3) 청소년 운동(활동) 토론회 및 백서 발행

- ① 청소년운동 연말토론회 : 한해 청소년 활동을 모두 모아내고 정리하여 이후 청소년운동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 마련
- ② 청소년활동 자료를 모아 백서로 발행하여 운동의 성과를 축적하고 배포한다.

4. 사업 일정

	사업
1월	청소년아카데미
2월	청소년위원회 수련회
3월	홍보매뉴얼 / 시도위원회 간담회/ 이슈포럼1회/홈페이지제작/노동인권교육기획
4월	시도위원회 간담회 / 정치체험교육(건학)홍보 / 노동인권교육홍보
5월	정치체험교육(건학) / 노동인권교육 / 이슈포럼
6월	
7월	정치캠프
8월	
9월	학생회 법제화 / 18세 선거권 인하운동 /
10월	
11월	학생의날 기념행사
12월	청소년인권토론회

>> 참고자료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

하병수/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



I.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구성의 배경

(1) 7차교육과정의 파행

현재 진행중인 7차교육과정을 잠깐 엿보자!

2000년에 초등학교부터 시작된 7차교육과정이 어느덧 2004년 고3을 끝으로 모든 학년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수능은 7차교육과정에 맞춰 실시된다. 고등학교 2,3학년 선택과목으로만 치러지는 2005 수능을 앞두고 '예고된 수능대란'이라며 전교조, 학벌없는 사회, 문화연대등 사회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7차교육과정은 수준별 교과, 선택형 교과, 국민공통 10개교과 운영을 특징으로 한다. 2000년부터 실시되어 온 7차는 입안초기부터 학생과 교육의 본질을 고려하지 못한 채 교육시장화를 앞당기고 입시교육을 더욱 구조화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적대로 현장은 혼란과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초1부터 고1까지 일련의 계통성을 요구하는 국민공통교육과정 운영은 초등 저학년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교과서를 만들어냈고 초·중등학생 모두 10개 이상 과목(사회의 경우 지리와 일반사회, 국사등 사실상 3개의 과목으로 나누어 가르치고 있다)을 매 학년마다 소화해내야 하기에 용량초과의 암기식 학습으로 구조화 될 수밖에 없다.

선택형교육은 파행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와 학생들의 과목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 수능점수와 연관되어 있는 과목일게다. 14~5과목중 영·수·국의 차지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음·미·체 교과는 찬밥이 되고 있다. 덕분에 음미체교사의 절반가량이 이미 중학교로 전보 조치되었다. 학생들의 과목선택권 보장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아래 도입된 7차선택형교육과정이 입시위주의 학업편식을 조장하고 있다. 권리로서의 다양한 선택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보통교양교육에 필요한 필수내용을 의미있게 조직해줘야 하는 책무에서 벗어나 과목선택과 학교선택으로 편향되어질 때, 교육은 파행이 된다.

수준별교육은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채 20%가 되지 않는다. 시행하는 학교 또한 부분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수준별 교육은 수십년간 진행해온 미국에서도 버림받고 있는 방식이다. 전인교육과 배치되는 방식이며 중하위학생들은 오히려 학업성취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것을 가르치면서 평가는 동일하게 하는 문

제등 96년부터 시작해 9년째 진행되고 있는 수준별 교육은 실효성이 전무하며 반교육적 방식일 뿐이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7차교육과정이 만들어졌는가?

7차교육과정의 기본 틀은 95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초안을 잡았으며, 이후 허경철, 조난심, 김재춘, 홍후조등 소수관변학자들의 미국식 아이디어에서 구체화되어왔다. 행정기관인 교육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이 중심이 되어 밀어부추기식 7차 추진의 결과가 '현장파행' '2005 예고된 수능대란'으로 귀결되고 있다. 교육과정 골격을 만드는 과정에 현장교원과 계층을 대표할 국민, 관련 단체들의 의견수렴은 전혀 없었다. 어둠속에 만들어진 그들만의 교육과정이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현장파행을 불러온 것은 자명한 결과다.

(2) 교육과정 정책수립의 비민주성, 비개방성, 비과학성

교육과정정책입안 - 학문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의 소유물

교육과정 정책은 모든 교육정책의 기초이다. 특히, 학교교육과정의 구체적인 틀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교육의 기본 설계도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입안에서 집행까지 충분한 합의를 거쳐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부 또한 교육과정의 위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의도적인 제도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지원 관리 기능인 교육행정, 교육재정, 교원의 양성·수급·연수, 교과서 등의 교재개발, 입시제도, 교육시설·설비등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로서의 기능을 지니게 되며, 이 고시는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¹⁾

교육과정정책이 여타의 교육정책수립의 기초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은 교육과정정책이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반증한다. 즉, 교육과정을 어떤 목표로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편성하느냐는 결국 누구를 위한 교육과정이나를 분명히 드러내준다. 이제껏 교육이 그러하듯 교육과정정책은 다수 국민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방향이 아닌 학문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학자와 불평등한 구조에 매몰된 소수 지식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다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대부로 통하는 정범모 교수 또한 기존의 폐쇄적이고 관행적 교육과정 입안과정에 대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해방 후 몇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에서 그때마다 도리어 과목수는 더 늘어 가고 내용은 더 많아지고 더 어려워 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거기에 시대변화에 적응한다는 구실과 덮어놓고 많이 어려운 것을 배우면 질 높은 교육이라는 허영도 작용했고, 자기 학문이 중요하다는 학과 이기주의도 크게 작용했다. **교육과정 구성의 원리와 절차의 실제**에 관한 철저한 자체 반성이 있음직하다.”²⁾

1) 강인수의, 『교육과정 질 개선을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3. 11

2) 정범모, 『교육과정·평가 개선을 통한 학교교육내실화』, 교육과정평가원5주년기념강연

피해자 = 교육의 주체인 국민, 교사, 학생

교육과정 정책의 위상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 입안과정은 보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전문적이어야 한다. 다수 국민들의 개입력을 높이고 현장교사들에게 정책입안과 집행의 통일성을 맞보게 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자, 농민 등 다수 국민들과 교육과정의 현장 실천가인 교사, 학습자로서의 학생들은 교육권의 실질적인 주체이면서도 이제껏 교육과정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과 논의에서 배제된 채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다수국민들은 보통교육을 겪어오면서도 생활과 세계에 대한 종합적 통찰력과 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갖지 못한 채 그저 학습과정이 출세를 위한 욕망에 사로잡히도록 유도되고 있다. 교사들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평가권을 갖지 못한 채 집행자로 전락해 하루하루 진도와 입시에 쫓겨 살아가고 있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인 자율적 실천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그저 자기학문 늘리기에 집착해 온 덕에 교육과정의 양과 난이도는 한없이 높아졌고 결국 학생들은 올바른 학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과도한 학습량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내용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통제, 학문이기주의 근거한 교육과정 정책입안과정, 현장 적합성을 고려하지 못한 소수 학자들의 아이디어 수준의 정책 등 교육정책입안과정의 소수독점체제는 교육과정 파행의 1차 원인이다.

(3) 민주적 교육과정 정책수립기구의 법적 근거 미비

나.

다. “교육과정의 제정 및 개정의 발의에 대하여 국가기관인 교육부의 공무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육과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하여 국민과 교원, 관련단체 등 사회적 요구를 수렴하여 발의하는 기구가 설치·운용되어야 할 것이고”³⁾

교육과정에 관한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적시한 “초·중등교육법 제23조”와 교육과정에 대한 제반 심의를 담당하는 “교육과정심의회 규정(대통령령)”이 국가수준교육과정 수립절차에 관한 법 규정의 전부다. 교육과정 제·개정에 있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으며 민주적 교육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갖춰지지 못했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질문에 충분히 답할 수 있을 정도로 법률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 **•누가?** 교육과정 편성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교육과정 개발 및 연구는 누가할 것인가? 교육과정 심의는 누가할 것인가? 관련단체는 어떤 지위를 갖고 참여시킬 것인가? 그리고 개발 및 심의기구의 위원은 누가 추천할 것인가?

마. **•무엇을?** 국가수준교육과정을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 지역수준 교육과정을 규정할 것인가? 학교수준·교사수준 교육과정은 어디까지인가?

3) 강인수 외, 위 자료, 「함수근 외, 홍후조 외, 김재복 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자료 선행연구자료 정리문에서」

- 바. **•어떻게?** 국가수준교육과정의 발의, 개발, 심의의결, 집행 절차를 어떻게 연계하고 어떻게 분담시킬 것인가? 교사에게 편성권을 주지 않고 집행권만 부여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노동자, 농민 등 다수계층의 개입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인권, 여성, 환경, 평화, 복지, 노동, 보건등 교육의 주요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사. **•언제?** 전면개정 시기는 언제로 할 것이며, 교육내용별 부분수시개정을 어느 주기로 할 것인가?

(4) 교육과정 개정방식의 변화

이제껏 교육과정 개정방식은 개정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 없이 5년 주기로 무조건, 모든 교과서를, 일시에 바꿔야 했다. 교육과정의 막가파식 개정방식은 문제가 많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논의되는 현시기 교육과정 개정방식의 변화는 교육과정 정책변화의 주요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교육과정의 수시상시개정방식에 대한 전교조의 줄기찬 요구(1997 ~ 2003), 교육과정 수시 개정의 대통령 공약(2002. 12), 수시상시개정을 위한 연구와 공청회(2003. 한국교육과정평가원)등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정방식도입은 교육과정 정책수립·집행기구와 그에 따른 법률 정비를 필요로 한다.

2.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의 상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과정정책수립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교육과정의 수시상시개정방식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의 일상적 논의구조를 위해 제안된 기구다. 이미 정부차원에서도 교육부 통제를 받는 기구로 국가교육과정위원회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을 제안하고 있다.⁴⁾

하지만, 국민들의 교육권, 사회흐름에 대한 올바른 대응, 현장교사들의 교육과정편성권 보장, 사회적 합의등에 기초해 교육과정정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정책수립기구의 성격과 지위가 이전기구와는 질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10대 원칙>

- 첫째, 소수이해에 종속되지 않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교육과정 정책수립 및 심의기구여야 한다.
- 둘째, 형식적인 심의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개발과 심의과정의 결합력을 높여야 한다.
- 셋째, 교육과정 논의 틀을 범사회적으로 확대 개편하여 교육과정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특히, 심의단계에서는 교육과정전문가, 현장교사뿐 아니라 각 계층을 대표하는 인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 넷째, 교육과정 수립범위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교원양성기관까지의 교육

4) 강인수의, 『교육과정 질 개선을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3. 11

과정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수준교육과정은 대강화, 요강화하여 단위학교에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교육과정개발주체는 교육전문가와 관련영역 전문가로 구성하되, 교육과정의 기획과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교사를 1/3이상 구성한다.

일곱 번째, 정책개발과 위원구성에 있어 교원노조 및 해당 분야 관련자들과의 논의 틀을 마련한다.

여덟 번째, 공식적 회의과정은 충분히 공개되고 방청을 허락해야 한다.

아홉 번째, 교육과정정책개발과 심의를 담당할 위원구성은 소수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별도의 위원선정위원회를 둔다. 특히, 선정위구성방식 또한 법률적으로 체계화한다.

열 번째, 교육과정에 관한 정책연구 및 학교실태조사, 통계관리를 위해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산하에 교육과정정책연구기관을 두도록 한다.

<교육과정 개정 및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과정 개정 및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교육과정 개정범위)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을 포괄한다.

제3조 (정의)

이 법률에서 '국가수준교육과정'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교원양성기관의 전문적 교원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하는 교육의 내용과 범위, 시수의 표준을 의미한다. 국가수준교육과정은 대강화, 요강화하여 상당부분 단위학교에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장 교육과정 개정

제 4조 (교육과정 개정 국민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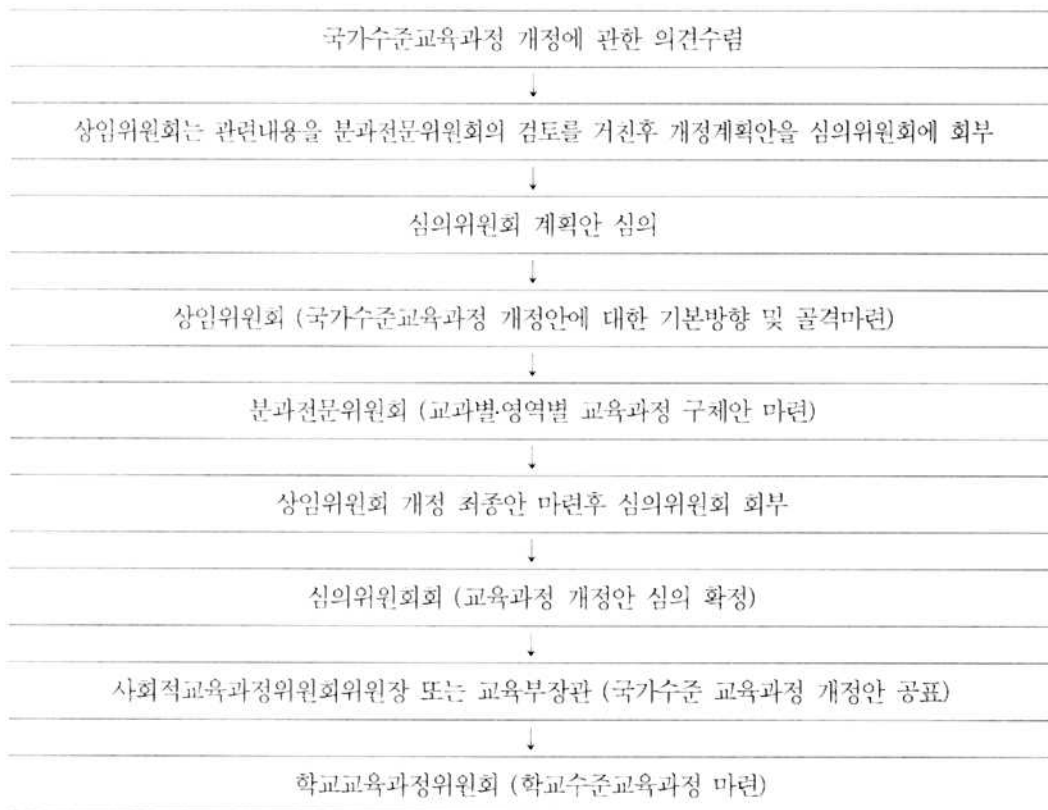
국민의 교육과정결정과정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단체 및 개인은 제2조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교육과정 개정안을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제 5조 (교육과정 개정 절차)

교육과정 개정은 다음 각호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 제 4조에 의거 일정한 시기 국가수준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상임위원

- 회는 분과위원회와 협의 후 심의위원회에 국가수준교육과정 개정 계획안을 회부한다.
- 심의위원회는 국가수준개정계획안을 심의한다.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수준개정계획안에 의거 상임위원회는 국가수준교육과정 개정의 기본방향과 골격을 마련한다.
 - 분과전문위원회는 상임위에서 마련한 국가수준교육과정 개정의 기본방향과 골격을 바탕으로 해당분야 개정안을 마련한다.
 - 상임위원회는 각 분과전문위원회 개정안을 총괄하여 국가수준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해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 심의위원회는 국가수준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하고 위원장은 국가수준교육과정을 공표한다. 다만, 공표는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6조 (교육과정 개정 범위 및 시기)

국가수준교육과정 개정 범위와 시기는 다음호에 따른다.

- 국가수준교육과정의 개선은 전면개정과 부분수정개정으로 한다.
-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는 제4조와 제5에 의거 종전의 교육과정 적용 후 정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거친 후 개정 범위와 시기를 확정한다.
- 부분수정개정시 교육과정 개정 범위는 학교별, 급별로 1년에 2개영역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정의 불가피성 정도에 따라 초과할 수 있다.
- 전면개정은 최소한 5년을 경과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총칙

제 7조 (주요 역할)

- ① 교육과정 논의 틀을 범사회적으로 확대 개편하여 교육과정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
- ② 국가수준교육과정의 방향과 기본 골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
- ③ 교육과정이 사회문화 전반의 주지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교육과정 내용과 개념, 교육영역간 균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⁵⁾

제 8조 (지위)

- ①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는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갖는 상설 심의기관으로 한다.
- ②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교육과정 위원회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 9조 (조직 및 위원구성)

- ① 상임위원회, 분과전문위원회, 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각 위원회별 위원은 위원선정위원회를 통해 구성한다.
- ③ 각 위원회별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심의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분과전문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위원장은 심의위원회위원장이 겸한다.
- ⑤ 각 위원회 위원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 10조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심의위원회, 상임위원회, 분과전문위원회 위원구성을 위해 위원선정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대통령은 선정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교육과정의 민중통제의 원칙을 지킨다. 3인은 교육부장관이 교원노조와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3인은 교육과정관련 전문성과 국민대표성을 고려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의 추천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3인은 노총이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 ④ 교육부장관과 국회의장, 노총대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위원선정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 추천기준과 추천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⑤ 선정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⑥ 상임위원과 전문위원은 교원노조, 교수노조와 협의 및 추천의뢰를 받아 구성한다.

제 11조 (의장 및 의결)

각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2조 (회의 공개)

5) 프랑스 『국가교육과정심의회』 주요역할 인용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방청을 허락한다.

제3장 위원회 운영

제 13조 (상임위원회)

- ① 교육과정 중론과 각론을 포함한 교육과정 전체에 관한 기본 골격 마련, 분과전문위원회 및 자문기구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결정된 교육과정의 제·개정과 관련된 내용, 교육과정의 개정 범위 및 시기등을 심의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 ② 상임위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교육과정전문가, 교과교육전문가, 학교별 급별 현장교사, 교육학자, 유아교육전문가, 직업교육전문가, 특수교육전문가, 문화예술교육전문가, 노동교육전문가, 인권교육전문가, 성평등교육전문가, 환경교육전문가, 보건교육전문가, 복지전문가, 청소년전문가등 교육과 관련영역 전문가로 구성한다. 단, 현장교사를 1/3이상 구성한다.
- ④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분과전문위원회와의 정기적인 논의를 진행 시킨다
- ⑤ 상임위 운영을 돕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상임위위원 중 10인 내외로 구성하여 상임위 논의 내용을 진전시키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시킨다.
- ⑥ 상임위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 14조 (분과전문위원회)

- ① 각 교육영역별 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각 위원회별 현장교사를 1/3이상 구성한다.
- ② 과목으로 세분화하지 말고 크게 묶어 분과위를 결성한다.
- ③ 교육내용 선정, 조직, 교수 학습 방법, 평가 등에 대한 내용 생산을 주목적으로 한다.
- ④ 교원노조 및 해당 분야 관련자들과의 논의 틀을 마련한다.
- ⑤ 상임위와 유기적으로 연관된 활동을 한다.
- ⑥ 각 분과전문위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 15조 (심의위원회)

- ① 교육과정 관련 제·개정과 관련된 내용, 교육과정정책 및 국가수준교육과정운영계획,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의 예산요구 및 결산, 분과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등을 심의·의결한다.
- ② 교육과정 논의의 진행과정을 검토한다.
- ③ 상임위 위원 전원과 각 계층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 ④ 계층 대표는 노동자, 농민, 빈민, 고등학생, 교육대학생, 사범대학생, 학부모등으로 구성한다.
- ⑤ 연 2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16조 (위원회 운영 실무)

- ①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국을 두어 상임위원회, 분과전문위원회, 심의위원회 진행을 위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 ② 상임위원회, 분과전문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상근을 하도록 한다.

제 17조 (교육과정 관련 국제연구기관 운영)

교육과정에 관한 정책연구 및 학교 실태조사, 통계관리를 위해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산하에 교육과정국제연구기관⁶⁾을 둔다.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관계법령 재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 (교육과정등)</p> <p>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p> <p><개정 2001.1.29></p> <p>③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 (교육과정등)</p> <p>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유·초·중등학교·교원양성기관교육과정에서 편성·운영할 교육과정의 주요 기준과 내용을 국가수준교육과정으로 정하여 고시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공통필수 교육과정의 교육영역별 최소이수단위 및 기본내용 설정을 중심으로 요강화, 대강화 한다.</p> <p>④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기준과 국가수준교육과정기준, 학교수준·교사수준의 교육과정이 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시설 및 자원을 정비하여야 한다.</p> <p>⑤ 학교의 장은 국가수준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교수준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단,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교직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한다.</p> <p>⑥ 교사는 국가 및 학교수준교육과정에 따라 교사수준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p> <p>⑦ 학교의 교과 및 교육활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⑧ 교육과정 편성의 준거로 삼기 위한 교육과정 기본목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정

2. 교육과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신설)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의 2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p> <p>① 국가수준교육과정의 조사, 연구, 개발,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하되 직부상 독립적 지위를 갖는 상설심의기관으로 사회적교육과정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교육과정 개정 및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p> <p>②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는 국가수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 연구, 개발, 평가, 심의를 기초로 한 발의안 또는 개정안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해야 한다.</p>

3. 교과용도서의 사용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 (교과용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p> <p>②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9조(교과용도서의 사용)</p> <p>② 학교는 제1항의 교과용 도서이외에 각급 학교의 교육목적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국가교육과정기준과 내용에 적합한 도서와 기타 교재로서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단, 교직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 현행 제 29조 ②항은 ③항으로 한다.</p>

교육과정개정 및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신설)

교육부와 범국민진영 연구안 비교

	교육인적자원부 연구안 ⁷⁾	범국민진영 연구안
교육과정국민제안	<p>제 23조의 5 (교육과정기준에 관한 의견 제안)</p> <p>국민의 교육내용결정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의 부처 및 기관, 학회 및 학술단체, 각종 교육관련기관, 교직원단체, 사회단체(학부모·학생단체 등)는 초·중등학교의 국가교육과정기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 또는 요구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p>	<p>제 4조 (교육과정 개정 제안)</p> <p>국민의 교육과정결정과정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단체 및 개인은 제2조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교육과정 개정안을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p>
교육과정개정절차	<p>제 7조(국가교육과정기준 개정 절차)</p> <p>국가교육과정기준에 대한 개정 요구를 수용하여 처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가교육과정기준 개정에 관한 제안을 국가교육과정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총괄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회부된 제안을 해당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조사, 심의하게 한다. ③ 총괄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에서 인정된 제안을 재심의한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답신한다.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답신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기준의 연구, 개발을 국가교육과정위원회에 위탁한다. ⑤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총괄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연구 개발 과제를 해당 연구 개발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다. 	<p>제 5조 (교육과정 개정 절차)</p> <p>교육과정 개정은 다음 각호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4조에 의거 일정한 시기 국가수준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상임위원회는 분과위원회와 협의 후 심의위원회에 국가수준교육과정 개정 계획안을 회부한다. · 심의위원회는 국가수준개정계획안을 심의한다.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수준개정계획안에 의거 상임위원회는 국가수준교육과정 개정의 기본방향과 골격을 마련한다. · 분과전문위원회는 상임위에서 마련한 국가수준교육과정 개정의 기본방향과 골격을 바탕으로 해당분야 개정안을 마련한다. · 상임위원회는 각 분과전문위원회 개정안을 총괄하여 국가수준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해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 심의위원회는 국가수준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하고 위원장은 국가수준교육과정을 공표한다. 다만, 공표는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강인수외, 『교육과정 질 개선을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 연구』(교육인적자원부, 2003)을 재 정리 한 것임

<p style="text-align: center;">운 실 및 구 관</p>	<p>명시하지 않음</p>	<p>제 16조 (위원회 운영 실무) ①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국을 두어 상임위원회, 분과전문위원회, 심의회 진행을 위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상임위원회, 분과전문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상근을 하도록 한다. 제 17조 (교육과정 관련 국책연구기관 운영) 교육과정에 관한 정책연구 및 학교 실태조사, 통계관리를 위해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산하에 교육과정국책연구기관⁸⁾을 둔다.</p>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 과정 개정 범위 및 시기</p>	<p>제 8조(국가교육과정기준 개정 범위 및 시기) 국가교육과정기준에 대한 개정 범위 및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교육과정기준의 개선은 전면개정과 부분수정으로 할 수 있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개정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별, 교과별 교육과정 개정 범위는 1년에 전체 교육과정의 1/5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가교육과정기준의 진단 평가 및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개정의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별, 교과별 국가교육과정기준의 전면개정은 종전의 국가교육과정기준 적용 후 최소한 5년을 경과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p>	<p>제 6조 (교육과정 개정 범위 및 시기) 국가수준교육과정 개정 범위와 시기는 다음호에 따른다. · 국가수준교육과정의 개선은 전면개정과 부분수정개정으로 한다. ·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는 제4조와 제5에 의거 종전의 교육과정 적용 후 정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거친 후 개정 범위와 시기를 확정한다. · 부분수정개정시 교육과정 개정 범위는 학교별, 급별로 1년에 2개영역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정의 불가피성 정도에 따라 초과할 수 있다. · 전면개정은 최소한 5년을 경과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p>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정

주요
역할
및
지위,
구성

제23조의 2 (국가교육과정위원회)
 ① 국가교육과정기준의 조사, 연구, 개발, 평가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교육과정위원회(가칭)를 상설 기구로 설치 운영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가칭,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교육과정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 기준에 대한 조사, 연구, 개발, 평가의 결과를 기초로 한 발의안 또는 개정안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안, 권고할 수 있다.
 제 23조의 3 (중앙교육과정심의회)
 국가교육과정기준의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교육과정심의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총칙
 제 7조 (주요 역할)
 ① 교육과정 논의 틀을 범사회적으로 확대 개편하여 교육과정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
 ② 국가수준교육과정의 방향과 기본 골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
 ③ 교육과정이 사회문화 전반의 주이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교육과정 내용과 개념, 교육영역간 균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⁹⁾
 제 8조 (지위)
 ①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는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갖는 상설심의기관으로 한다.
 ②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교육과정위원회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 9조 (조직 및 위원구성)
 ① 상임위원회, 분과전문위원회,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각 위원회별 위원은 위원선정위원회를 통해 구성한다.
 ③ 각 위원회별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분과전문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위원장은 심의위원회위원장이 겸한다.
 ⑤ 각 위원회 위원임기는 4년으로 한다.

9) 프랑스 『국가교육과정심의회』 주요역할 인용

<참고> 외국 사례

1) 프랑스

프랑스 교육과정개발 구조



- 국가교육 최고 심의회(CSE)
 - 교장, 교사, 장학사, 노조원, 고등학생, 대학생, 학부모 대표자, 공공단체, 각계인사들이 모인 기구
 - 최종적으로 투표하여 교육과정안을 결정하면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을 책자로 출간
- 교육부 : 학교교육부(DESCO)
 - 교육부 장관은 문서화된 교육과정의 채택을 국가교육 최고 심의회에 건의
- 국가교육과정심의회(CNP)
 - 교육부장관이 구성원 임명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포괄
 - 교육부 상설 자문기관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제안, 교육과정이 프랑스 전반의 사회 문화적인 변화나 추이를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교과 내용, 개념, 교과간의 균형에 관한 토론을 함
 - 구성(2002년 현재) : 교과전문가, 교사, 교사교육자, 장학사, 교육학자 22명(1명의 초등학교 교사, 4명의 중등교사, 1명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의하는 교수, 4명의 교육총괄 장학국의 장학사, 10의 대학교수, 2명의 국가과학연구센터 연구원)
 - 자문위원회와 협의진이 있으며 이들은 특별 작업을 중심으로 서로 연관
 - 이들이 정한 내용을 교원노조, 학부모회(국가 최고 교육위원회?)가 토론회하여 결정
 - 교과전문가집단과 협의하여 진행
 - 교과전문가집단 책임자 선정
 - 교과전문가집단이 제출한 교육과정이 부족할 경우, 수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별금을 부과할 수도 있으며, 직접 국가교육과정심의회에서 재구성할 수 있음
- 교과전문가집단

- 국가교육과정심의회가 제시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과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 문서를 작성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

- 대학교수, 여러 교과 담당 교사, 장학진으로 구성

◦ 국가교육총괄장학국¹⁰⁾

- 초중고등학교와 직업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지역 교육청의 장학사 집단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교육과정의 지역화에 기여

- 모두 14개 교과 전공 집단이 있으며 156명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 14개의 전문 영역에는 경제 및 경영, 체육교육, 예술교육, 초등교육, 학교와 학교생활, 역사와 지리 통합 교과, 외국어 교육, 문학, 수학, 철학, 물리-화학 기초 및 응용, 경제 및 사회학, 과학과 산업기술, 생물 및 지구과학 분과가 있음.

-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 수석 단장을 중심으로 분과가 운영되며 분과마다 매년 연구 주제가 결정되어 종합 연구보고서를 제출

- 복수교과적 접근, 초등학교 잉여 직책의 활용, 초등학교에서의 외국어 교육 실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시간 활용에 관한 현장 관찰 임무 수행

◦ 아카데미(지역 교육청)¹¹⁾

-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아카데미를 통하여 지역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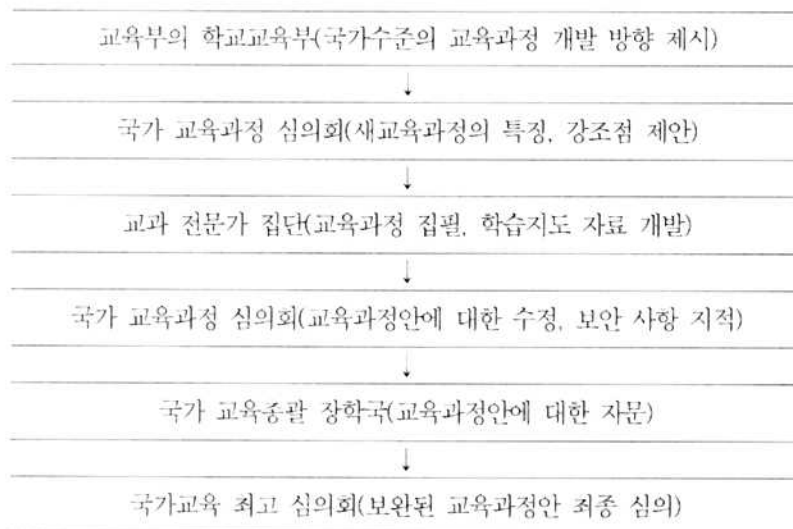
- 국내와 다른 것은 대학까지 총괄

- 31개

◦ 단위학교(프로젝트, 계획)

-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마련할 수 있음. 아카데미와의 계약을 통해 재정적인 뒷받침을 받음.

<그림> 프랑스 교육과정 개발 절차



10) 교육과정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성격을 가짐

11) 교육청의 지원센터 모델

2) 미국

◦ 연방정부

- 교육은 각 주의 권한으로 인정
- 주나 학교구에 10% 정도의 예산 지원
-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들의 시행 자금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재정적인 인센티브 등을 통하여 교육에 영향을 줌(인종차별정책 폐지, 학교재정분배의 평등화, 저소득층 및 장애 어린이의 교육기회 확대, 교사 전문성 개발 등)

◦ 연방교육부

- 교육정보의 출판, 교육에 관심이 있는 집단과 기구와의 협동적 관계 수립, 교육 연구 추진, 교육 문제에 관한 지도 상담 및 의견 교환
- 국가과학재단 등 국가 기관을 통하여 연방 정부의 교육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지원 및 교육의 방향 제시

◦ 주정부 : 해당 주의 모든 공립학교 예산의 거의 절반을 지원, 교육의 입법적 기능 담당

◦ 학교구 : 주와 국가의 교육정책을 수행할 책임, 해당 학교구를 위한 교육 정책을 수립

◦ 주(캘리포니아)정부

-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성인교육, 학령전교육 등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

◦ 주교육위원회

- 위상 : 주 교육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결정하는 기구로서 주 기준, 교육과정 체제, 교수 매체, 평가의 영역에서 K-12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 K-8에서 사용될 교과서를 채택하고, 교과서 채택을 위한 입법을 수행

- 역할

-- 공립학교 및 임명자 등과 관련된 각종 규칙 및 규정을 승인

-- 교육과정 체제와 교수 자료 승인 및 재정 지원

-- 연구와 계획, 기준 승인, 평가 승인, 학교교육구 재조직, 차터스쿨 승인, 재정 배분, 학급 규모 감축 프로그램 승인

- 구성 : 위원은 주지사가 임명, 학생 위원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

◦ 주교육과정위원회

- 주 교육위원회 자문기구

- 11개의 소위원회(집행위원회, 역사/사회과학 교과 위원회, 수학교과 위원회, 영어교과위원회, 과학교과위원회, 외국어교과 위원회, 보건 교과 위원회, 체육교과 위원회, 예능교과 위원회, 전기학습 자료 교과 위원회)

- 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되며, 임명권자는 주 교육위원회, 주지사, 주 하원, 주 상원임, 13명은 주 교육위원회에 의해 임명하며 13명 중에서 최소한 7명은 현직 교사들이어야 함을 명시

- 주 교육과정위원회가 교육과정을 개발하면 교육위원회가 승인

※ 미국 국가 수준 수학 기준 개발 절차¹²⁾

- 미국수학교사협회 임원위원회 국가 수준 수학 기준 필요성 제창
- 1987년의 시안은 미국수학교사협회의 1만여 명의 회원에게 유포되었고, 검토 결과는 전문가 협의회, 수학교육 영역의 회원 그룹, 수학교사협회 소속 위원회를 통하여 수합되었으며 기준이 출판된 이후에는 보급, 해석, 실행에 초점을 둔 활동들이 이루어짐
- 개발 절차의 가장 중요한 국면은 기준의 내용에 대하여 수학교육 관련 학회 및 조직과 전국민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었음
- 학교 수학 교육과정/평가 기준, 수학교사 전문성 개발 기준 등 3개 주요 기준안을 2000년도에 발표
- 집필진 : 교사, 교사 교육자, 행정가, 연구자, 수학자
- 웹사이트 공개를 통해 전국민적 의견 도출 및 반영

년도	사건
1989	학교수학교육과정평가 기준 개발 완료
1991	수학교사 전문성 개발 기준 개발 완료
1995	학교수학 평가 기준 개발 완료
1996	기준 개정 승인
1996-1998	시안 개발
1998-2000	시안 검토 및 수정
2000	학교수학의 원리와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개정된 기준 발표

<표2> 미국 국가 수학교육기준의 개발 및 개정 절차

3) 호주

- 연방정부 : 학교교육에 관한 주요한 사안이나 특수 목적의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공평성이나 질 문제에 관여, 막대한 교육재정 지원을 지원하지만 지역교육은 주 정부의 정책과 모형에 따라 운영
- 주/특별구 정부 : 공립학교 교사 자격, 교사 임용 및 선발에 관한 권한, 교사 급여나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각종 실비 관련 예산 집행



12) 2002년까지 미국에서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교육과정은 수학과에서만 개발되었음.

<그림5> 호주 교육위원회 구조

◦ 교육위원회(the Board of Studies)

- 원칙적으로 교육부와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운영되어 독자적인 기능을 담당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 권한 :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교육과정 개발, 대학입학 시험 개발 및 관장, 비공립 학교 등록(교육과정 개발과 교사 참고 자료 제작, 10학년 학교 자격 시험과 12학년 고등학교 자격 시험 주관, 학생 평가 체계, 교육정책 개발, 교사 참고 자료 개발, 평가 정책에 관한 자문, 사립학교 교육 지원)

- 위원 구성 : 주지사가 임명한 위원장, 3명의 전직 교육부 담당관, 19명의 선출 위원(주 정부 이사회 지명자 1인, 주 학부모 및 시민 연합 위원회 지명자 2인-초1/중1, 주 가톨릭 교육위원회 지명자 1인, 사립학교 연합회/교장 협의회/사립 여학교 교장 연합회 지명자 1인, 사립학교/가톨릭 학교/주학부모협의회 학부모 대표 1인, 사립학교 조합으로부터 지명받은 사립학교 교사 1인, 주 초등 교장 협의회와 중등교장협의회 각각 으로부터 지명받은 공립학교 교장 2인, 주 교사연합회 지명자 2인, 유아교육 전문가 1인, 원주민 전문가 1인, 장관 지명자로서 교육분야에 식견을 갖춘 인사 6인)

--> 여성, 장애, 원주민, 비영어권 아동의 교육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 9개의 하위원회 : 초등 교육과정 위원회, 사립학교인가 위원회, 원주민 교육 자문 위원회, 진로 교육자문 위원회, 대학 시험 및 고등학교 시험 자문 위원회(중등학교 교육과정 담당), 평가 자문위원회, 평가 위원회, 통계 및 측정 자문위원회, 특수 교육위원회

◦ 교육과정위원회(Board Curriculum Committees, BCC)

- 위원 구성 : 교육위원회 위원 1-2명, 주 교육부 지명자 2명, 주 교육부 TAFE 영역 1명, 주 교사 연맹 지명자 2명, 사립학교 조합 지명자 1명, 주 원주민 교육 자문 그룹 지명자 1명, 가톨릭 교육위원회 지명자 1명, 사립학교 연합회 지명자 1명, 학부모 시민 연합회 지명자 1명, 특수교육 전문가 대표 1명, 주 교사연합회 지명자 1명, 주 학부모 협의회/가톨릭학교 학부모 협의회 지명자 1명, 초등교장 협의회 지명자 1명, 학교 지역사회 기구 지명자 1명

- 역할

-- 개발 프로젝트 과정을 거치면서 각각의 단계에서 프로젝트 팀에게 자문

-- 교육과정 문서 개발과정에 대한 자문단 섭외

--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산출된 문서 평가

--- 개발된 교육과정 문서 교육위원회 승인 요청

-- 교육과정 개발 과정 절차의 적절성 평가

--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교육과정 문서 대비 교육과정 패키지의 질 평가

◦ 교육과정 개발 프로젝트 팀

- 교육위원회가 모집

- 선발조건 : 해당 교과 지식에 대한 지식, 교사 경력, 교육과정 검토 혹은 개발 경험, 문장력

■ 참교육과정을 생활교육과정으로 ■

이 문 석 / 전교조 학생청소년위원장
경기 화정고등학교, edupt@chol.com

- 목 차 -

- I. 7차 교육과정 그 후...
- II. 참교육과정을 생활교육과정으로
- III. 생활교육과정의 개념
- IV. 생활교육과정의 운영
- V. 생활교육과정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
- VI. 생활교육과정의 구조
- VII. 학생생활운동가들이 해야 할 일
- VIII. 생활교육과정을 현실의 교육과정으로 만들기

I. 7차 교육과정 그 후...

7차교육과정이 초중등 각급학교에서 완성됐다. 완성과 동시에 7차교육과정의 실패가 예상대로 드러나고 있다. 완전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공시되었던 고 2,3학년 교육과정은 6차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영수중심의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광기를 보이며 집착했음에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집행되지 않았으며 심화보충형 교육과정 또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임이 드러났다. 교육과정 자체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학교현실과 동떨어진 교육과정임은 입증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교육과정 입안자들은 현장의 개움을 비난하고 있지만 연구의 현실적합성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키는 어렵게 됐다. 연구자의 탁상공론과 미국교육 배끼기가 현장을 얼마나 왜곡시키고 힘들게 하는지 아직도 7차교육과정은 온 몸으로 증언하고 있다.

7차교육과정의 실패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전면 개편 없는 수시부분개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 5일제 시행과 맞물려 7차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손봐야 하는 형편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교육과정의 방향에 대한 의견은 정부와 민중진영이 180도 상반된다.

정부는 7차 교육과정의 정신을 심화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다. 인적자원 개발 중심의 7차 교육과정 정신은 수월성과 다양성 중심의 맞춤형 교육, 분리교육, 실용주의 교육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중진영은 범국민교육연대 공교육구조 학제 개편안¹³⁾을 통해 이에 문제제기 한

바 있다.

벌써 15년 넘게 전교조는 교육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 왔다. 그것은 제도 개선투쟁을 통해서도 진행되었고, 전장의 수업 속에서, 학생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현장의 내용을 변화시킬 교육과정의 구성에 대한 개입은 진행되지 않았다. 주어진 내용을 조금 다르게 가르치고 활동하는 것은 그래서 늘 한계에 부딪히고 현장의 달인들은 참교육의 실천가가 아닌 기능의 달인이 되어 갔다.

이제 더 이상 실패할 것이 100% 예견되는 교육과정으로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은 그만 두어야 하며 그것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주체는 전교조와 민중운동 진영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 그 동안의 실전을 교육과정에 녹여 내야 할 때다.

II. 참교육과정을 생활교육과정으로

그렇다면 어떤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주병환 교수의 의견¹³⁾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1. 생태학적 비전을 심어주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생태학적 비전을 심어주는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매일 100 개 정도의 생물종이 사라지고 있고, 매년 덴마크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열대 우림이 사라져 가고 있는 심각한 생태학적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을 통해 우리는 학생들이 일상적인 삶의 양식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자연 생태계를 남용·파괴·불경하는 태도 자체를 불식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생태학적 비전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1) 생명 존중의 가치관

환경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살아 있는 유기체로 이해하려는 생명 윤리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황중환, 2001). 그리고, 생명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명 존중의 가치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모든 생명체가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간을 포함한 다른 생명체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인간의 도덕적 책임의 범위를 모든 생명을 보전하는 데로 확대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다. 요나스(H. Jonas)는 모든 생명 현상을 결정해 주는 것은 '자유'라고 보고 있다. 가장 원시적이고 낮은 수준의 아메바 종

13) 2003년 7월 16일 공교육개편 심포지엄 자료집 p70, 범국민연대
"교과구성 원칙"

주지교과(실용교과)중심교육과정에서 탈피하고, 문화 예술적 영역을 강화해야 한다. 영수국 중심의 교과과정을 탈피하고 인문, 사회와 역사, 과학과 기술, 예술교육, 체육교과의 비중을 동등하게 키운다. 음악, 미술, 연극, 문학, 무용, 체육 등을 폭넓게 배워야 한다. 그리고 비교과 교육과정(생활교육과정)은 체계적으로 비중 있게 포함시켜야 한다.

14) 참교육연구소 5차 수련회 자료집, 참교육연구소, 2004

류에서부터 시작해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존재 양태와 생명의 원리는 바로 자유라는 것이다. 그는 모든 생명체의 가장 기본 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질대사를 단순한 화학 반응의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생명체가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해 기존의 한계를 박차고 나오려는 가장 기초적인 자유의 형태로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한정선, 2001).

이렇듯 모든 생명체가 살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그 생명체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의 자유를 인정함과 동시에,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이고 내재적인 가치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우리가 인간의 생명과 다른 생명체를 보존하기 위한 신성한 책임을 지니는 것이야말로, 도덕적 존재로서의 우리의 참모습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생태적 정체성의 확립

우리는 인간과 자연은 적대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환경이 더 이상 훼손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 생태적 정체성이란 지구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각 개인의 개성, 가치, 행동, 자아 개념을 해석하려는 것을 의미한다(Thomashow, 1996). 따라서 자연은 단순한 대상이나 도구가 아니라 동일시의 대상이 된다. 생태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생활 경험을 해석함에 있어서 사회적·문화적 상호작용을 넘어서게 된다. 생태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생활 경험을 해석함에 있어서 지구와 자신의 관계, 생태계에 대한 인식, 직접적인 자연 체험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생태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은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라 자연의 한 구성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또한, 우리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인정한다. 생태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저마다 독자적이고 내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인간이 함부로 생태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중시한다.

정정호(2000)는 생태학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생태적 인간(homo ecologicus)이라고 부르는 가운데, 생태적 인간을 위한 7개 항의 선언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간이란 동물은 지구에 존재하는 삼라만상 중의 한 종에 불과하다. 패권적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 생물종의 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전지구적 윤리학이다. 지구는 삼라만상이 상호 의존하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둘째, 인간의 유일한 삶터 지구에는 공기, 물, 땅 기타 가용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며, 그 자원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원의 과용은 다음 세대의 것을 미리 훔치는 행위이다.

셋째, 오늘날 인간과 지구에 위기와 재앙을 가져오게 한 시구의 근대론을 혁파해야 한다. 근대 기획을 획일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다 해도 근대를 성찰하고 비판하여 생태학적 탈근대성으로 만들어야 한다. 근대 문명의 판을 다시 짜야 한다.

넷째, 경제 효율 제일주의와 과학 기술 중심 사상이 인간에게 편리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많은 고통과 재앙을 가져다 준 판도라의 상자이다. 인간은 하늘에 구멍을 내고 열대림을 파괴하고 바다와 강을 더럽히고 다른 종들을 멸절시키고 있다.

다섯째, '지금 여기'를 지탱 가능한 세계로 만들기 위한 희망의 문화정치학과 생태 철학,

환경 과학, 경제 정책, 과학 기술 등이 모두 학제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인간들의 공동 노력으로 생명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전지구적 거대 이론을 화급하게 창출해야 한다.

여섯째, 전지구적 생태 위기에서 우리의 마지막 선택은 생태적 인간으로의 획기적인 변신이다. 인간은 무책임한 종말론적 비판론에 빠지지 말고 지금까지의 실패와 과오에서 새로운 미래학을 수립하려는 '비극적 환희'를 가져야 한다.

일곱째, 생태학적 상상력의 요체는 의미 있는 타자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은 타자를 강제로 지배하거나 작위하지 않고 다만 상호 교환하고 활성화시킨다.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위대한 힘이다. 생태학적 혁명가인 생태적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따라서 생태학적 상상력의 발현이다.

3) 생태 공동체 의식의 확립

환경 위기의 근본 원인은 바로 자연 환경과 비인간적 실체를 우리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이나 자원으로 여기려는 그릇된 태도와 사고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깨끗한 공기와 물, 음식, 비옥한 토양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는 생태계의 능력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롯하여 미래 세대,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을 위하여 좀더 겸허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는 전체 지구 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생태계를 위협에 빠뜨리는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생태 공동체 의식이란 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역할과 책임을 의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태 공동체 의식을 지닌 사람은 보다 확대된 도덕 공동체 개념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편협한 이기주의에서 탈피하여 전체 생명체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의 생명 원리인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생태 공동체 의식을 지닌 사람은 부족한 것에서 만족할 줄 알며, 전체 생태계의 안정과 조화를 위해 스스로를 억제할 줄 안다. 이것은 전체 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행동이 전체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세심하게 고려할 줄 아는 금욕적인 자세를 지닐 것을 요구한다. 또한 생태 공동체 의식을 지닌 사람은 생태계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와 자연 그 자체를 위한 책임이다. 부모가 자기에 의존적인 아이의 복지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미래 세대의 존재를 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만큼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평등한 생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자연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생태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은 확대된 책임 개념에 입각하여 행동한다.

4) 생태학적 세계관의 정립

학교교육은 생태학적 세계관을 갖춘 인간을 육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밀브레이스(Milbrath)는 지배적 사회 패러다임(Dominant Social Paradigm)에서 새로운 생태 패러다임(New Ecological Paradigm)으로의 이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이태건, 2001).

근대의 지배적 사회 패러다임	탈근대적인 새로운 생태학적 패러다임
1. 자연의 가치를 경시함 - 자연을 상품 생산에 이용, 인간의 자연 지배, 환경보다 경제 성장을 우선	1. 자연에 높은 가치를 부여 - 자연 자체를 애호함, 인간과 자연의 전 존재적 관계, 경제 성장보다 환경을 중시
2. 좁은 범위의 특수한 연민 - 인간은 욕구를 위해 다른 종 파괴, 타 인종에 대한 무관심, 자기 세대에만 관심	2. 넓은 범위의 일반화된 연민 - 다른 종에 대한 연민, 타 인종에 대한 관심, 미래 세대에 대한 관심
3. 부의 극대화를 위해 위험 감수 - 과학과 기술의 승배와 맹신, 핵무기의 개발, 대규모 경성 기술 강조, 자연 보호를 위한 정부 규제 소홀	3. 위험을 피하고 사려 깊은 계획과 행동 - 과학 기술에 대한 비판적 통제, 핵무기의 개발 정지, 소규모 연성 기술의 개발, 자연 보호를 위한 정부 규제 강조
4. 성장의 한계 거부 - 자원 고갈 부인, 인구 문제 경시, 생산과 소비의 강조	4. 성장의 한계 인정 - 자원 고갈 인정, 인구 폭발의 문제 인정, 자연의 보존과 유지 강조
5. 현재 사회에 만족 - 인간의 자연 파괴는 심각한 문제 없음, 위계 질서와 효율, 시장 강조, 경쟁, 복잡하고 바쁜 생활 양식, 돈을 벌기 위한 노동	5. 새로운 사회의 추구 - 인간의 자연 파괴로 자연과 인간 모두에 심각한 문제 발생, 개방과 참여, 공공재 강조, 협동, 협동, 단순한 생활 양식, 노동 자체의 즐거움
6. 기존의 정치 - 전문가에 의한 지배, 시장 기능의 신뢰, 제도 정치 강조, 좌우 대립, 생산 수단 소유 여부	6. 새로운 정치 - 협의와 참여, 준비와 계획, 직접 행동 불사, 개발과 환경이라는 새로운 축의 형성

2.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는 교육과정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향한 삶의 방법적 원리를 개방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해 나가는 공동체적 삶의 과정이다(한국교육개발원, 1993a). 학교교육에서는 삶의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민주적 태도·가치·행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진공 상태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피터스(Peters)는 민주주의를 운영할 사람들은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음으로써 성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이홍우, 1984). 또한, 린지(Wringe, 1984)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사회 성원 개개인이 사회 공동체의 운영에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영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렇게 볼 때 민주주의는 시민 개개인의 지적·도덕적 자질을 요구하므로, 민주주의에 있어서 학교교육 특히 시민 의식 교육이 갖는 중요성은 다른 어느 정치 체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린지는 학교를 민주주의 사회의 존속을 위해 요구되는 태도와 덕목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규정하고, 교사의 역할로서 민주주의 사회 건설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민주적 가치를 가르치는 일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볼 때, 어떤 사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회를 지속시킬 수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민주적 시민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민주 사회의 성원들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버츠(Butts, 1980)는 민주 시민이 지녀야 할 가치로서 정의, 평등, 권위, 참여, 공공선을 위한 개인적 의무, 자유, 다양성, 프라이버시, 공정한 절차, 인권을 제시한 바 있다. 버츠는 이러한 덕목들이 민주주의를 올바른 형태로 지켜주는 기본적 가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앵글과 오초아(Engle & Ochoa)는 민주 시민에게 요구되는 조건을 기본적인 지식, 민주 사회적 이상에 대한 서약, 기본적인 지적 기능, 정치적 기능으로 파악하고 있다(정세구, 1991).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교육에서 민주적 시민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매우 미진한 것처럼 보인다. 자신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학생에게 집단적인 괴롭힘을 가하는 태도, 현실 도피적인 방식으로 약물이나 자살에 의존하는 태도,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는 가운데 권리만을 내세우는 태도, 집단이나 공동체보다는 자신의 편안함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 등이 우리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부분적으로 증명해 준다. 나는 학교교육에서의 민주적 시민성을 가르치기 위한 우리의 시도가 두 가지 오류를 범해 왔다고 믿는다. 하나는 우리는 민주적 인성을 가르침에 있어서 주로 사회화의 측면만을 강조했을 뿐, 반사회화의 측면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앵글과 오초아에 의하면, 반사회화는 독립적인 사고와 정치적 자유의 핵심이 되는 사회 비판을 할 수 있도록 의도된 학습 과정을 의미한다(정세구, 1991). 다른 하나는 민주적 시민성을 가르침에 있어서 그것이 대부분 이론적 지식의 전수에 그쳤을 뿐 학생들의 체험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민주적인 시민을 양성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실제적 경험임에도 불구하고(이홍우, 1984), 우리는 학교교육을 통해 민주주의 및 민주적 시민성에 관한 이론적 지식만을 전달해 주는 데 급급하였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민주적 시민성의 학습에 있어서 심사숙고(deliberation)하려는 인성을 길러주어야 함과 동시에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 자체 속에서 민주적인 삶의 방식을 체험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심사숙고는 결정을 하기 위한 주의 깊은 심사를 의미한다. 거트만(Gutmann, 1987)은 심사숙고하려는 인성의 개발이야말로 민주적 주권 사회라는 이상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우리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시민으로

서 정치적 주권을 공유한다는 민주주의 이상에 부합하여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권위에 따라서 행동해야 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적 시민성의 학습에 있어서 심사 숙고하려는 인성의 중요성은 공적 담론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민주주의는 '그 시민들이 공적 심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는 교육적 명령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다. 우리는 공적인 논쟁의 질과 폭 그리고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고, 미래 사회의 시민이 될 학생들로 하여금 공적 영역에 있어서 그들 나름의 목적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도덕적·정치적 이슈에 대한 공적 담론은 같은 생각을 가진 시민들끼리 사적으로 행하는 사적 담론과는 구별되는 그 나름의 가치와 특징을 갖고 있다. 공적 담론은 이해·합의·타협을 위하여 상이한 가치 체계를 지닌 사람들을 담론에 끌어들인다. 공적 담론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상당히 폭넓게 정의된 가치와 신념이 공유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심층적이고 중재 불가능한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소수가 간과되거나 좌절감을 맛보게 되는 다수 지배라는 초보적 형태를 넘어 서기 위해서도 공적 담론은 필요하다. 따라서 공적 담론의 증대는 심사숙고하려는 인성의 계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한편, 우리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 속에서 학생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실제적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밴시클(VanSickle, 1983)은 민주주의가 실천되고 있는 학습 상황을 특징짓는 다섯 가지의 가치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① 개별 학생들은 학습할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② 개별 학생들의 복리가 극대화되어진다. ③ 보상과 처벌의 체계가 개별적 성취에 의해 좌우된다. ④ 각 개인은 타인의 복리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줄 책임을 지니고 있다. ⑤ 각 개인의 복리 그리고 교실 집단 및 나아가 더 큰 사회의 복리를 증진시켜 주는 지식, 기능, 태도들이 가르쳐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민주적 교실에는 아주 집중화된 지위 체계와 의사 결정 체계가 만연하고, 지위 지향적이고 경쟁적인 정의적 관계가 존재한다. 또한, 비민주적 교실에서는 중앙 집권의 강제적 사회 통제가 행해진다. 이와는 달리 민주적 교실에서는 확산된 지위 체계가 존재하고, 학생 참여에 의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며, 협동적이며 인간적인 정의적 관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민주적 교실에서는 교사와 학생 양자에 의해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한 사회 통제가 행해진다. 따라서 민주적 교실은 아주 구조화된 교실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적 교실은 명확한 의사 결정, 분명하게 한계가 지어진 학생 참여와 영향력, 민주적으로 내려진 결정을 지지하거나 위반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결과 처리,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기 위한 절차와 역할, 그리고 잘 정의된 개인적 자유와 집단 책임 등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교실 속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는 그 스스로가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시범 보일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한국교육개발원, 1993). 교사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 속에서 어떤 경우든지 학생들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되고, 학습자의 인간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교과 지도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교사는 수업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강조하고, 수업 진행에 관한 의사 결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급적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수업 지도에 있어서 학생들의 합리적인 사고력과 의사 결정 능력을 육성하는 데 힘쓰고, 학생들의 대화·토론·토의 능력 신장을 도모하며, 협동적인 과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3. 평화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는 교육과정

학교교육은 평화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20세기에는 전쟁으로 모두 1억 3천만 명이 희생되었을 정도로,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세기였다(임삼진, 2000). 이제 우리는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상이한 삶의 목적과 가치에 대하여 관용적인 자세를 가지며, 서로 차별하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해야 한다. 학교교육이 평화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 이 때의 평화는 전쟁의 부재라는 소극적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때의 평화는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조를 지향하는 비폭력적 사회 변혁과 협동을 함축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이다(고병헌, 1993). 따라서 평화는 전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의 조건들,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조성된 상태를 의미한다.

학교교육에서 평화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교육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평화교육은 더욱 정의롭고, 지속 가능하며, 덜 폭력적인 세계를 향한 협력을 위해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평화교육은 전쟁과 폭력적인 행동은 인간의 복리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전쟁과 폭력적 행동은 인간 본성의 필수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사실, 존재·조직·행동하는 방식으로서의 평화는 학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본 가정으로 설정하고 있다(추병완, 2002). 평화교육의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히크스(Hicks, 1990: 90-93)는 평화교육의 학습 목표를 기능, 태도, 지식의 측면에서 논의한 바 있다. 한편, 히크스의 논의에 바탕을 둔 가운데 강순원(2000)은 우리 나라에서의 평화교육의 목표를 지식의 영역, 자세·가치·태도의 영역, 기술의 영역으로 삼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지식의 영역에는 군축, 식민주의, 제국주의, 분단, 통일, 핵, 환경, 발전, 계급, 인종, 인권, 정의, 민주주의, 성, 관용, 전쟁이 포함되어 있다. 자세·가치·태도의 영역에는 양보, 비폭력, 생태학적 관심, 미래에 대한 전망, 진리에 대한 헌신, 공동체 의식, 자율, 자기 존중, 타인 존중, 상호 이해, 상생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기술의 영역에는 중재, 협동, 명상, 놀이 노작 활동, 대화, 토론, 타협, 비판적 사고, 창의적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평화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자 할 때, 교사는 다음의 영역을 중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인적인 측면: 개인의 내면 상태의 조절 능력,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 관계의 측면: 다른 사람과의 평화적 관계(타인 존중, 협동, 공존, 배려), 평화적 갈등 해결 능력.
- 평화 문화 형성의 측면: 관용의 교육과 문화(다양성과 이문화 이해), 비폭력적 환경의 조성.
- 평화 실천의 측면: 평화 관련 정보의 이해·의식화·실천, 개인적·사회적·국가적·세계적 차원에서의 실천.

한편, 학교교육을 통하여 평화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자 할 때, 교사는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휘태커(Whitaker)는 인간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위한 교사의 기능과 자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감해 주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학생의 입장에 서서 학생의 경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각 학생을 개별적이고 독특한 인간으로서 다정하고 사려 깊은 존중을 해 주어야 한다. 셋째, 학생들과 개인적으로 개방적이고 솔직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정적이어야 한다. 넷째, 학생들은 긍정적이고 건설

적이며 효과적으로 학습하기를 원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병헌, 1993). 학교 수업에서 평화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교수·학습 방법이 바로 협동학습과 구조화된 논쟁 학습이다. 교사는 협동학습의 활용을 통하여 긍정적 상호 의존성, 개별/집단 책임감, 대면적·즉진적 상호 작용, 집단 분석, 개인간/소집단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주병완, 1999). 또한, 교사는 구조화된 논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반대 입장과 논리를 이해하고, 반대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을 신장시켜 줄 수 있다(주병완, 2000).

4. 삶의 기능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는 교육과정

학교교육은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삶의 기능들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어야 한다. 즉, 학교교육은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의 기능들을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과 몸과 정신에 대해 책임감 있는 보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어야 한다. 이를테면, 성·질병·약물·사이버 중독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이렇듯 최근의 건강 개념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하고 좋은 상태를 의미한다. 즉, 건강은 인간 존재의 모든 것을 포함한 상태로서 그러한 상태가 잘 기능하는가에 관계가 있는 개념이다. 하지만 학교교육에서는 육체적 건강 못지 않게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주의 심리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신 건강은 행복한 삶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자호다(Jahoda, 1977)는 정신 건강을 자신에 대한 태도, 자아 실현, 인격의 통합성, 자율성, 현실에 대한 적합한 지각, 환경의 지배라는 여섯 가지의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신에 대한 태도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있는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아 실현은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자아 실현은 자신이 맡은 일이나 타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헌신과 공감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마음의 균형을 이루고 인생에 대하여 일관된 태도를 가지면서 자신이 직면하게 되는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저항하고 대응할 때 우리는 인격의 통합을 이루게 된다.

인격의 통합성과 더불어 개인이 환경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 즉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도 정신 건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자신을 둘러싼 외부의 현실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아는가 하는 문제도 정신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끝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스스로 환경을 향하여 움직여 나가고 적응하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달성하려고 시도한다. 즉,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환경에 대하여 수동적으로만 반응하려 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자신을 움직이려고 노력한다.

나는 자호다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영적인 동경과 신선한 감상력을 갖게 하는 것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이가 제대로 먹지 못하면 신체적 성장이 잘 이루어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이 제대로 양육되지 못하면 개인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 오늘날 우리의 학생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 현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영적인 공허함이다. 그들은 일상적이고, 물질적이고, 분화된 존재 그 이상의 어떤 중요한 것을 동경하고자 하는 것, 외적인 것보다는 인간 경험의 보다 심층적인 내적인 삶에 대한 탐색에 있어서 소홀함을 보여주고 있다(Kessler,

2000). 이것은 곧 그들에게서 삶에 있어서 목적 의식의 결여로 이어지고 있다. 무언가 초월적이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영적인 동경을 통하여 우리는 삶에 있어서 목적을 발견하고, 보다 나은 의미를 추구할 수 있다. 영적인 동경을 통하여 우리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감각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영적인 동경을 통해 우리는 자신·타인·자연과의 깊은 연관성, 성찰을 위한 침묵, 의미와 목적의 추구, 초월적 경험과 창의적 충동을 갖거나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영적인 동경은 자아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함으로써 자아와 도덕성을 통합시켜 주기에(Colby & Damon, 1992), 정신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한편,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신선한 감상력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매슬로우에 의하면, 정신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계속적인 신선함 감상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한다(이혜성, 1982). 그에 의하면 자아실현인은 경험들이 아무리 반복되어도 즐거움과 경외와 놀라움 같은 신선한 감각으로 경험한다고 한다. 따라서 신선함 감상력을 가진 사람은 삶의 경험으로 싫증내거나 지루해하지 않는다. 우리의 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위해 학교와 학원을 전전하며 지루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했었던 첫 날에 느꼈던 새 학교의 신선함이 졸업하는 날까지 첫날처럼 유쾌하게 보인다면, 아마도 우리의 학생들은 시험 불안이나 학교 거부와 같은 부적응 양상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는 여덟 가지 기준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예방적 자원의 정신 건강에 주목함으로써 학생들이 점점 복잡해지는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데 필요한 삶의 기능들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런 고민들을 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생활교육 과정으로 제안한다.

III. 생활교육과정의 개념

참교육과정을 생활교육과정으로 제안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학생들의 다양한 생활의 창조가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는 것과 학생들의 생활적 토대를 교육과정이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생활의 창조가 가능한 교육과정

생활의 창조가 가능한 교육과정이란 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교육과정을 생활에 다가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교실에서 세계를 해석하는 지식만을 가르쳐왔고 배워왔다. 교사도 학생도 대체 이것이 어디에 필요하고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인지 수업과 활동에 녹여내지 못해 왔다. 몇몇 교과를 통해 지식을 생활경험까지 확장시켰지만 전 교과가 그렇게 하진 못했다.

그렇다면 지식을 생활 경험까지 확장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계에 대한 해석을 넘어 세계를 바꾸어 가기 위한 지식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과학은 새로운 자연계의 탐구를 위해, 수학은 보이지 않는 새로운 대상을 찾기 위해

배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를 바꾸고자 하는 지식은 학생들의 삶의 터전에서 사용되어야만 현실성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은 수업이라는 1형식 안에서가 아니라 소통하고 참여하고 실천하는 새로운 다양한 형식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키워진 세계를 바꾸고자 하는 원대한 꿈은 결국 자연에 대한 이해, 삶에 대한 이해,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등 화석화 된 지식이 아니라 세계관을 이루는 지식과 실천 속에서 가능하다.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문화 경험이 중심이 되는 활동이 교육과정 안에서 새롭게 고민되어야 한다. 그것은 지식을 실천하는 것이어야 하고, 바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2. 학생의 생활 토대를 중시하는 교육과정

학생들의 생활 토대를 중시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일상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의 문화를 지양해야 할 것, 고쳐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 교육현장의 모습이었다. 특히 노동자들의 자녀들에게 고급문화를 가르친다는 명목 아래 취해진 조치들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자아관을 심어주기도 했다.

학생들의 생활 토대를 중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학생들이 지식과 삶을 구분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자기 자신의 생활 토대를 소중히 여김으로써 긍정적이고 혁신적인 생각들을 키워나갈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개개인의 생활 토대를 다 존중할 수 있는가?' 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다. 단서는 있다. 교사 개인이 왜 이 문제를 모두 풀어야 하는가에 의문부호를 붙이고 아이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다.

일단 수업에서는 수업의 주도권이 교사에게 모두 모여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수업을 실험해 보는 것이다. 단, 이 수업의 원리는 열린수업 처럼 개별화에 있어서는 안 된다. 존중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관계는 협동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실천과정에서는 각 계급의 생활문화가 어우러지도록 하고, 지식과정에서는 각 계급의 생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IV. 생활교육과정의 운영

1. 지식교육과정(오전)

프레어리는 페다고지를 통해 지금 우리의 교육을 은행저금식 교육이라 비판한 바 있다. 은행저금식교육은 학교에서 접하는 무수한 지식을 의심하지 않고 가치를 따지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하게 함으로써 기득권세력이 위기의 시대를 장밋빛 환상으로 덧칠해도 아이들은 세상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한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고급지식으로 분류되어 노동자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을 거부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지식은 현

제의 억압적 구조를 정당화 하는 주류지식일 뿐이다. 어찌보면 상당수의 지식들은 허구일 것이다. 진정한 지식교육은 언제나 문제제기식 교육이어야 한다. 교사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지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방법론에 매몰되지 말고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제껏 많은 교사들이 지식의 전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심에 놓았다면 이제는 옳고 그른 것을,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떤 사회를 위한 것인지 따져가며 가르쳐야 한다.

이러한 가치를 지향하는 가치중심적교육은 지식과 학생들의 경험을 구분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경험과 교사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은 재구성되어야 한다. 모든 지식은 누군가 일방에서 만들어내야 하기 보다는 언제나 사회적 승인과정을 거쳐서 생산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 교육과정의 대다수 내용은 현존하는 세계에 그대로 편입하기 위한 주류지식을 대변하는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 졌을 뿐이다.

아이들이 자신의 세계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식을 암기하는 것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지식을 완결된 것으로 보지 않고 지식의 구성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긍정할 수 있고, 사회 속에서 스스로의 관점을 형성하고 인식을 확장할 수 있다.

2. 실천교육과정(오후)

실천교육과정은 지식교육과정의 문제의식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평화·생태·인권·노동 등 다양한 실천을 도모하고, 민주시민으로써 갖추어야 할 토론능력, 협상능력 등 자치적 생활 원리를 배우고 예술문화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감수성, 상상력, 기획력, 매체 해독 등 풍부한 생활문화적 소양을 갖추며, 스스로의 삶의 터전을 운영하고 기획하는 교육과정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학생자치활동, 학급활동, 삶 나누기 활동, 동아리활동, 예술문화 활동, 체육활동, 주제 중심 토론활동, 지역 및 사회활동 등으로 조직할 수 있다.

실천교육과정을 공식적인 교육과정으로 만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7차교육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이 그저 지식중심의 교육과정의 변형에 불과하다면 실천교육과정의 공식적인 교육과정 편성은 학생들과 교사들의 삶의 과정이 곧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V. 생활교육과정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

1. 균형적 인간성장 - 교육의 본질적 목표를 향하여

‘자치활동’과 ‘학급운영’은 교육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과활동에 비해 평가절하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양성과 연수등 교사교육과정에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¹⁵⁾

15) 학급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설된 과목은 실제 1과목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그나마 실

전적으로 교사 개인의 '노력'과 '헌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균형적 인간성장을 돕는데 있어 지식활동 중심의 교과교육과정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학교 진학에 중심을 둔 입시교육으로 인해 여타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음지'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초·중등 보통교육과정 목표로 중요시되어야 할 □□ '민주시민으로서 기초소양' □□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적 소양' □□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적 학습문화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교육활동과 동아리 활동, 학생자치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공식화함으로써 '입시 교육'으로 음지화 되어 있는 실질적인 교육목표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생활교육과정'의 공식화는 균형적 인간성장을 돕는데 있어 교과활동이 갖는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치부되었던 교육영역을 명시화하고 교과활동과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다.

2. 학교를 이탈의 공간에서 자치·복지·인권의 공간으로

1) '부적응학생'을 위하여

부등교, 폭력, 왕따등 소위 제도교육에 부적응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대처는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협소한 훈화교육, 강압적 체벌, 일회성 프로그램등 뻔할 수준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교과공부 이외의 다른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는 것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과공부를 중심으로 한 통제적 생활지도 방식이 결과적으로 문제아 아닌 문제아를 더 많이 양산한다.

□□지각과 지각의 횟수가 1번 2번 늘어나거나 교칙이 정한 용의 복장의 범위를 벗어날수록 문제아로 진전되는 조짐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문제아로 낙인된 아이들은 학교통제를 매우 끔찍하게 생각하고 계속되는 일탈행위에 해방감을 만끽하기도 합니다.□□

□□전 이미 찍힌 걸요. 선생님들 말은 다 재수가 없구, 짜증나고 그래요. 똑같이 잘못해도 우리한테 더 뭐라한다니까. 찍힌 애들끼리 있으면 그냥 재미있어요. 점심시간에 몰래 나가 빵 먹고 놀고, 아침에 혼자 일찍 오는 것보다 애들하고 늦게 오는 게 더 좋아요.□□

이러한 부적응 학생들의 변화에 예민하게 주시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조기에 차단할수록 유능한 담임으로 인정받게 된다. 소위 문제아와 다른 아이들의 갈등 문제는 이러한 통제적 학교문화가 양산하는 경우 많으며 그것에 대한 해결책 또한 문제아들과의 분리, 체벌을 중심으로 한 억압적 행동치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러한 일반화된 부적응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학교는 '공부'만 시키는 곳, 다양한

제에 근거하지 못한 '문'중심이다. 자치활동에 대한 것은 전무하며,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이해는 대 학생활의 학생회 활동 경험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교과외 다양한 교직원무수행에 필요한 교직원과목은 전체 150학점 중 14학점(9.3%)정도에 그치고 있다. 연수에 있어서도 학급운영과 자치 활동은 교원단체의 자율연수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적성을 수용할 줄 모르 곳, 개인자를 인정하지 않는 곳등 '무능'의 산실이 아닌 다양한 적성이 수용되고 살려지는 대안적 능력을 갖춘 곳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특히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생활'에 대한 학생들의 권리를 적극 보장해 주고, 공동의 의사결정을 통해 집단적 책무성 강화함으로써 학생이탈현상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자치활동과 학생들의 주체적인 문화활동은 아직까지 당위적 주장과 개인의 헌신성에 기반하고 있다. '학생 생활'을 교육적으로 조직하는 일을 보다 '공식화'하고 '체계화'¹⁶⁾하는 것은 이탈문제에 대한 학교대처에 있어 질적 전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2) 보통학생(잠재적 이탈자)들의 무기력 탈출을 위하여

학교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소위 '날라리' '부적응학생'으로 불리워진다. 이들은 항상 교사들과 인상을 구기며 마주쳐야 하는 골치덩어리들로 낙인찍힌다. 부적응-낙인-부적응의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스스로를 아웃사이드로 절대화하는 경향으로 흐른다. 때로는 소수이지만 대항문화를 형성해 주체적인 삶을 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탈현상은 소위 '날라리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학교는 일반학생들도 잠재적 이탈자로 규정하고 있다.

<표1> 청소년의 학습참여방식과 그 유형별 주요 학습행동¹⁷⁾

학습참여방식	학습행동
학교의존 입시집착형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입시준비에 치중하는 학교교육에 순응 ·학교교육 활동 중 입시관련 학습에 선택적 몰두 ·입시와 관련이 없는 학교교육 활동 의식적 기피
사교육의존 입시집착형	·과외와 학원 등이 입시준비에 더 효율적인 것으로 선호 ·수업시간 잠보충, 학원숙제, 학원공부
무기력 학습기피형	·학교생활 부적응 행동(정체성이 미확립된 무기력 행동, 저성취와 학습부진) ·등교거부(무단조퇴, 무단결석, 상습적 지각 조퇴, 장기결석) ·수업과 상관없는 딴 짓 하기(수업시간 잠자기, 핸드폰으로 쪽지보내기, 잡담하기, 옆 친구와 장난치기) ·수업의욕상실 행동(수업 준비 안하기, 빈 가방 들고 학교등교한 상태로 멍하니 앉아있기)
도피반항적 학습기부	·자퇴, 가출, 자살
새로운 학습제제 구축	·탈학교모임, 홈스쿨링, 학력 및 학벌 절제연대 참여

16) 인성지도, 각종 사고예방교육등 학생이탈현상에 대한 대안적 교육프로그램은 학생회 활동, 학급 운영, 클럽활동, 동아리 활동등 자치활동과 함께 '생활교육과정'의 틀로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17) 『입시경쟁 교육체제에서의 청소년 학습문화』, 교육사회학연구, 2002

우리나라 청소년 학습문화는 <표1>과 같이 정상적인 학습문화라기보다는 청소년들이 학교학습에서 나타내는 다양한 일탈학습행동 만큼이나 일탈되어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하여 명시적, 잠재적으로 일탈학습행동을 학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정유성(1997)은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이 삶의 정체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오로지 공부라는 학습활동만이 있을 뿐 실제 생활이 없고, 공부에 직업적으로 전념하는 학생신분이 있다.”고 주장한다. 최윤진(1999)은 “청소년의 문제와 비행을 조장하는 장본인 중의 하나가 학교라는 지적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한준상(1997)은 “우리나라 학교를 폭력의 장이라고 지칭할 수 있으며, 학생들간의 작은 폭력보다도 학교의 교육과정과 입시훈련 과정이 더 큰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80%의 청소년들이 우리교육과 사회를 불신하고 있으며,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기성세대에게 걱정과 우려 그리고 충격을 주기 위해 70%정도의 청소년들이 반항을 하고 있다.¹⁸⁾ 그러나 청소년들이 학습참여에서 나타내는 반항행동은 주류 교육문화가 강요하는 학습목표와 학습의 실재를 대체 할 수 있는 대항문화 성립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¹⁹⁾

학생들 대부분은 한계적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주도성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삶의 현실과 경험들을 일상적으로 성찰하고 주체적이고 대항적인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또한 입시벌레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활동과 자치활동을 통해 보다 나은 보편적 삶의 질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는 ‘미래를 위해 현실을 희생하는 학생들의 삶’이 아닌 ‘좋은 사회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복지적 공간’이어야 한다.

18) 『전국 청소년 생활 실태 조사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년, 만 10세~20세이하 전국남녀 청소년 5,262명

·사회, 국가에 대한 인식 : 80.8%에 달하는 청소년이 사회현실에 불만이라고 답했다. 항목별로도 빈부 격차가 심하다. 80.3%, 집안이나 뒷 배경이 중시된다. 77.8%, 성차별이 심하다. 67.8%, 올바른 일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77.5%, 학력차별이 심하다. 79.5%, 출신지역 차별이 심하다. 56.7%, 일부사람만 혜택을 받고 있다. 75.6%등으로 대답

·교육현실 평가 : “학교교육으로부터 올바른 인격형성에 도움을 받는 바가 없다.”라는 평가에 54.7%가 동의했고, 마찬가지로 적성과 소질개발에도 62.7%가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회에서 졸업장을 중시하지 않는다면 학교에 다니지 않겠다는 청소년은 33.7%나 됐다. 그럼에도 54.8%는 명문대학을 나와야 출세하며 65.1%는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한편 초·중학생이 느끼는 학업부담과 스트레스는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자아관 : 청소년들의 성취의욕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나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4점 만점에서 초등학교의 성취의욕은 3.16으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3.303), 무직청소년(3.02), 대학생(3.01), 취업청소년(2.99), 고등학생(2.97)등의 순으로 낮아졌다.

19) 『입시경쟁 교육체제에서의 청소년 학습문화』에서 발췌

3. 생활과 문화적 리터러시(종합적 문해력)을 교육과정의 중심으로

1) '생활' - 교육의 중심 '테마'로의 대전환을 위하여

현재 학생들의 '생활'은 절제와 통제 대상이 되어 버려, 자기 삶을 긍정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갖고 있지 못하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생활은 철저히 입시의 틀에 맞춰 조직되는 경향이 있다. 소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지도라 함은 학생 '생활'을 지각하지 않기, 아침자습시간에 정숙하기, 종치면 책상에 앉기, 두발 복장에 신경 덜 쓰기, 집에 일찍 귀가하기등 '공부'를 위해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프레이리, 지루, 비고츠키등 수많은 진보적 학자들은 학생들의 '생활'을 교육내용의 중심으로 끌어와야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프레이리는 현재의 학교교육은 '생활'을 배제하고 오직 관념화된 지식을 암기하는 은행저금식 교육이라고 비판했다. 학생들의 생활을 교육과정에 끌어안기 위해서는 수업은 대화식이어야 하며, 교육과정 구성에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함을 역설했다.

A : □□□□민주주의□□란 이런 것이다. 이것 외에는 정답이 없다. 너는 이것을 부정하지 말고 철저히 암기해라. 나는 너보다 민주주의를 많이 배웠다. 내가 알려준 것 틀리면 5번을 똑같이 써와야 한다.□□

B : □□자~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너희들의 '경험'과 지식속에서 과연 민주주의 무엇이고 어떤 민주주의어야 하는지 생각하고 정리해 다음시간에 토론을 해보자. 그리고 생각을 나눠보자. 다른 친구들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해보고 스스로를 평가해보자. 그리고 새로운 결론을 내려보자. 그리고 현재 학생회가 제대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지 평가해보자. 교직원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과연 학교민주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

교과교육과정에 학생들의 좋은 '생활경험'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삶은 자치적이고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체험이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좋은 경험은 지식의 가치를 판단하는 준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교육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치·민주·공동체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체계적인 과정이다.

현재 아이들은 학교생활에서의 공식적 시간을 활용하는데 있어 타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시간이 아닌 자기화하는 시간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기 생활을 의미있게 조직하는 경험만이 권위에 의해 수동적이고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이는 '우민화된 민중'이 되지 않는 길이다. 이런 의미에서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학생자치활동이 교육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는 시간에 한다거나 스스로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사람'이 아니라 '자치활동을 의미있게 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으로 인식해야 한다. 자치활동은 정규교육과정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의미있게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공식적인 생활교육과정 실현은 학생들의 '생활'을 적극적으로 교육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하며 적극적인 시간투자의 대상으로 자치활동을 인식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2) 은행저금식 학습방식 → ‘문화적 리터러시’와 ‘주체적 학습문화’로의 전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수많은 지식이 학교교육내용에 반영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부담면에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현재의 교과목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새로운 교육내용의 흡수가 교과목 신설로 흐르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은행저금식 지식교육은 이미 한계에 이르고 있다.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은 백화점식 또는 은행저금식 교육과정 구성보다는 보통교양교육 목표에 맞게 생성력이 높은 보편적 교육내용을 ‘가지’지향적으로 조직하는 것, 암기력외 감수성, 상상력, 창의력, 기획력, 비판력, 매체 해독력, 의사소통능력등 문화적 리터러시 즉, 종합적 학습문해력을 높이는 것, 주체적인 학습문화 형성등이 실질적인 대책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단지 ‘그들의 요구’에 따라 교육되어지거나 ‘컴퓨터’ 한대 주고 ‘알아서 해라’식의 방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체적으로 무슨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훈련’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훈련을 위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가 부여되고 그런 권리들에 의해 ‘자치활동’이 보다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적 리터러시를 키우기 위한 문화예술활동의 영역도 교과영역만큼이나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새로운 학습환경 구축

1) “관계론”을 교육의 중심축으로 전환

가치있는 지식은 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사실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쳤다고 보다는 기득권세력의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는 것이 대다수다. 교실에서의 지식교육은 적어도 교사-학생간, 학생과 학생간의 긴밀한 소통을 거쳐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학생들은 자신의 생활경험과 지식을 분리하지 않으려 할 것이며, 남의 세계관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려는 수동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은 이렇듯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있는 지식의 습득을 통해 인간은 성장한다. 인간의 본질적인 성장은 개인의 본성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관계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인간의 성장이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사회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근본으로 규정한다고 했을 때, 개인을 둘러싼 사회와 인간관계를 의미있게 조직하는 것은 교육의 근본임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한다. 협동학습, 학급회의, 소집단 활동, 집단공연등이 강조되어왔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 있는 것이다.

또한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매여있는 현실 사회에 높은 지위를 점령하기 위하여 주류지식을 더 많이 섭취하려는 개인간의 경쟁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교육의 목표는 이러한 일방지식의 통과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학습환경은 개별학습보다는 관계망을 중심으로한 공동체적 소통구조일 수 있다. 교육이 형성되는 근본과 본질적 목표를 생각할 때 ‘공동체 생활 원리’를 기반으로 학습환경 구축을

위해 생활교육과정 수립은 보다 체계화되고 공식화 될 필요가 있다.

2) 본질적 학습권 수립을 위하여

‘학습권’은 모든 민중들에게 쥐어진 것이다.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평등하게 ‘학습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학습권’은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가 앉아 듣는 권리로 협소화 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심각한 ‘사학 비리 문제’와 ‘교육개혁’을 위해 거리로 나온 교사들의 탄압이데올로기로 사용되어지기도 한다. 마치 ‘시민의 발’을 불모로 과업을 하는 지하철 노조를 이기집단으로 몰 듯이 ‘학습권 침해’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한 탄압이데올로기 곧 잘 이용되곤 한다.

아이들은 늘 따분한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아무리 잘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자율학습을 시켜주면 날 뛰듯이 좋아한다. 아이들에게 ‘수업’은 따분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내재화 되어 있다. 또한 균형적 인간성장을 도와주는 교양교육보다는 진학에 도움을 주는 지식만을 의미있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져 있다. 평가받지 않는 지식은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한다. 음미체 평가방식의 전환(서열평가→서술형 평가, 내신제외)이 학생들에게 버림받는 과목으로의 전락을 의미하는 것임이 엄연한 현실이다.

학습 받을 권리란 보다 좋은 환경에서 학습을 받고 학습에 영향을 주는 자원결정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자치구조 확립과 학교참여의 공식화는 본질적인 학습권 실현의 맥락속에서도 고민되어야 한다. 또한 ‘주지교과중심의 학습’들에서 벗어나 균형적 인간성장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보다 생산적인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것은 본질적 학습권 정립에 기여할 것이다.

5. ‘학력’의 새로운 정립

흔히 교과영역을 축소하고 전인교육에 걸맞는 다양한 교육활동 확대를 반대하는 논거중 핵심은 “학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학력’에 대한 2가지 오해가 있다. 하나는 학교가 ‘입시’교육을 철저히 해야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학력은 대학수학능력이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 현재 초중등 보통교육과정은 ‘보통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교양교육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오직 ‘진학’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전락되어 있다. 초중등 교육이 철저히 대학으로부터 종속되어 ‘학력’에 대한 가치 정립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학력에 대한 첫 번째 오해 풀기 : 학교가 입시교육을 철저히 하면 그 학교 학생들은 과연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가? 현재 ‘대학수능’에 기반한 ‘학력’은 점점 가정의 재력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²⁰⁾ <표1>과 같이 ‘부모의 재력’은 곧바로 학생들의 ‘학력’을 결정짓고 있다.

20) 우리나라의 입시경쟁은 교육기회의 불균등한 배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부담 공교육비가 현저히 떨어지고 사부담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이것은 부모의 재력에 의해 학력이 결정되고 학력-사회계층의 악순환을 구조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001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 특성조사 보고서』(2001년 7월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서울대 신입생의 아버지 직업이 고소득 화이트칼라인 경우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생산적인 경우는 감소하였다. 더구나 [표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부모 세대

0교시, 야자, 심야학원을 다니더라도 결국 '부모의 재력'을 갖춘 상위 5%만이 소위 일류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학력-계급-학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학력주의는 경제적 불평등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는 주범이기도 하다.

'학력'에 대한 두 번째 오해 풀기 : 과연 학력을 대학수학능력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학업 성취능력 국제비교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성취능력은 초등학교에서는 높게 나오고 있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취수준의 지하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단순암기' 학습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험을 앞둔 벼락치기 학습문화는 '학력'을 '대학수학능력'에 직결시킨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암기하는 능력'은 진정한 학력이 아니다. 암기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쉽게 까먹는 경향이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학업성취도와와의 관계가 '0'에 가깝다는 사실은 2003년 한양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학벌없는 사회'에서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오히려 수능점수가 높은 학생이 대학학업성취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수능이 누군가가 잘 조직해준 교육내용을 잘 암기한 사람은 선별할 수 있어도 단순지식의 암기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자기학습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가절하하기 때문이다. 수능 주문형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는 학원에 학생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왜곡된 학습문화는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획득'에 소홀하게 되고 결국 '공동체적 사회'형성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출세지향적인 삶의 윤리만을 양산하게 된다. 현재 '학벌주의'가 사회를 망치는 주범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지 않은가?

좋은 '학력'은 출세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 획득'을 위한 '학습능력'을 말한다. 이것이 민주시민교육을 지향하는 보통교육과정에서 획득되어야 할 학력인 것이다.

생활교육과정은 교양교육에 걸맞는 '자치력', '민주적 생활력', '공동체 생활력', '문화적 문해력', '진로탐색에 따른 학습조직력'을 기를 수 있는 과정이다.

의 관리직·전문직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8.7%인데 비해, 올해 서울대 신입생 아버지의 관리직·전문직의 비율은 52.8%나 된다. 고급공무원이나 기업체 간부이상 되는 부모의 자녀들이 부모세대의 비율보다 3배 가까이 서울대에 입학한 셈이다. 또한 지역별로 볼 때, 2001년 서울출신 신입생이 전체 신입생 중 절반에 가깝고(47.3%), 광역시까지 확대하면 77.0%에 육박한다. 그리고 1999년에는 서울출신 신입생 중 44.6%가 강남구(239명), 서초구(152명), 송파구(83명) 등 일명 부자동네 출신이며, 인문계고등학교 졸업생 대비 서울대 합격률에서 강남구(2.01%), 서초구(1.92%), 동작구(1.25%)가 상위를 차지하여 강북에 위치한 하위 구들과 최대 10배의 차이를 보였다. 결국 조금 비약해서 말하면 □□이젠 돈 많고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부모와 함께 대도시 부자동네에 사는 것이 서울대 가는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1998년에 교육개혁위원회는 □□경쟁력 있는 대학교육의 기회를 대도시 중산층 출신 학생들이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공교육 개편 심포지엄 p34~35, 범국민교육연대, 2003. 7.16 -

<표1> 2001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아버지 직업분포와 일반적인 직업분포 비교(단위 :%)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관 매직	농어업숙련노 동자	기능, 기계, 조작, 조립, 단순노무직
서울대 2001학년도 신입생 아버지 직업분포	28.0	24.8	16.5	15.0	15.9	
2000년도 일반적인 직업분포	18.7		11.2	23.9	10.2	36.0

- 1) 관리직 : 기업체 경영중(5인 이상 고용), 기업체 간부(부장 이상), 고급공무원(중안관서
과장 이상), 사회단체 간부, 군인(영관급 이상), 경찰(경정 이상)등
- 2) 전문직 : 의사, 약사, 대학교수, 변호사, 판사, 검사, 회계사, 언론인, 방송인, 예술인,
엔지니어, 종교인, 체육인, 예술인, 교사, 간호원 등

◆ 4개 대학학생들의 수능평균점수와 부의 계급별 분포

부의 계급	o대학 (서울)	z대학 (서울)	ㅈ대학 (지방)	ㅍ전문대 (서울)	평균
평균수능점수 (상위 백분위 %)	1.12%	5.49%	14.28%	20.65%	6.63%
자본가계급	45(18.2%)	13(8.1%)	0 (0.0%)	7(8.2%)	65(10.9%)
중간계급 I (전문직/관리직)	125(50.6%)	63(39.4%)	11(10.3%)	15(17.6%)	214(35.7%)
중간계급 II (하위사무직)	34(13.8%)	39(24.4%)	28(26.2%)	5(5.9%)	106(17.7%)
노동자계급	14 (5.7%)	12(7.5%)	18(16.8%)	25(29.4%)	69(11.5%)
뿌터부르주아지계급	24 (9.7%)	25(15.6%)	27(25.2%)	20(23.5%)	96(16.0%)
농민계급	5 (2.0%)	8 (5.0%)	23(21.5%)	13(15.3%)	49(8.2%)
합계	247 (100.0%)	160 (100.0%)	107 (100.0%)	85 (100.0%)	599 (100.0%)

VI. 생활교육과정의 구조

1. 예시1 - 김경옥 선생님²¹⁾ 의견을 재구조화한 것임.

교과구 성원칙	교과교육과정		비교과 교육과정
	인지(지식)교과	문화 예술 영역	
	언어문화(국어,외국어), 사회과학(사 회,역사,지리,정치,경제), 자연과학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수학	음악, 미술, 연극, 문학, 무용	학생자치활동, 클럽활 동, 학교행사, 인성교육

	단계	내용	활동시간
발달단 계에 따른 교육내 용	1단계(유아)	교과간 구분 없앰, 주제나 활동중심 교육과정 구성	오전활동
	2단계(초등) - 전/후기 * 전기보다 후기에 좀더 내용을 분화한다.	국어, 예술, 체육, 사회-과학,	오전활동
		학생자치활동, 클럽활동, 학교행사, 인성교 육	오전활동
	3단계(중등) - 전/후기 * 전기보다 후기에 좀더 내용을 분화한다.	사회,역사,자연과학,생활과학,국어,영어,제2 외국어, 시각예술, 연희예술, 체육	오전활동
		학생자치활동, 클럽활동, 학교행사, 인성교 육	오후활동

교육내 용 구성단 계	기본과정(범교과내용 포함)	*국가수준 : 80% 교사학생수준 : 20%
	체화과정(활동중심과정)	

교수학 습 방법	협력 학습(대집단, 소집단)
	개 별 학 습

학습원 리	지식의 암기 방식 → 지식정보의 역사적 문맥 이해, 학습자의 문화적 리터 러시가 가능하게 구성(반성적 판단력, 창의력, 기획력, 상상력, 감수성, 의 사소통능력, 매체해독 및 사용능력 함양)
----------	--

21)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2. 예시2 - 손지희 선생님²²⁾ 의견을 재구조화 한 것임.

◇ 참교육과정 총론

<국가 단위의 교육과정 편성>

- 0. 교육과정 구성단위 :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학교재량 교육과정
- 0. 공식적 학교교육활동의 범위 : 교과교육과정, 비교과교육과정(관심·특기 활동 영역, 자치 활동 영역)
- 0. 학기제 운영
- 0. 중등교육의 교육목표에 입각하여 공통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
(수준별, 선택 중심 교육과정 폐지 - 선택은 제 2 외국어와 학교재량교과에 국한)

<교과 편성의 방향>

- 0. 예술, 체육교육 강화
- 0. 중등심화과정에서 인문사회교과 비중확대와 내용의 공공성 강화
- 0. 현행 교과체제에서 출발
- 0. 지속교과와 학기 당 이수교과로 구분하여 학기당 이수교과수 축소
- 0. 학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통합중등단계는 교과내용 수준 및 분화 정도에 의해 기초, 심화로 구분하여 교육과정 운영.
- 0. 중등심화단계의 경우 현재의 계열별 심화과목 중 일부는 폐지하고 일부는 난이도를 조정하여 공통교과화 (계열분화와 심화교과는 대학단계로 이동)
- 0. 평가의 선발기능 제거 (일정기준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절대기준평가 도입)

<수업시수>

- 0. 주당 수업시수는 초등단계 20-25시간, 중등단계 28 ~ 30시간 정도
(학교재량교과시간포함, 5일제 수업 기준)
- 0. 국가수준에서는각 교과당 이수 상, 하한선만 규정 : 공통교과 최소단위의 합이 총 수업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한다.
- 0. 총수업일수, 총수업시수에 대한 학교 재량 확대

22) 전교조 정책연구국장

◇ 보편교육기간의 학교교육과정 열거

영역	교과교육과정	비교과교육과정	
		관심/특기활동	자치활동
영역	<input type="checkbox"/> 기초도구교과(3R) 국어/외국어(1,2)/수학 <input type="checkbox"/> 지식교과 인문·사회과학 / 자연과학	<input type="checkbox"/> 문화 활동 <input type="checkbox"/> 사회참여 활동 <input type="checkbox"/> 진로탐색 활동(중등 후반부)	학급/학년/학교 수준에서 학생자치조직을 결성하여 활동. 학교운영위원회 등의사결정과정에도 실질적 권한과 의무를 갖고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고 실험하는 과정
	<input type="checkbox"/> 감수성 교과 (음악/미술/체육 등) <input type="checkbox"/> 노작 및 주제교과 (기술/가정/성평등/노동/환경 등)	<input type="checkbox"/> 교육단계별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편성	
	<input type="checkbox"/> 지식/기능/이해/표현/비판/실천		
목표	지성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알며 사회세계에 대한 비판적 문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실천을 하는 시민의 양성		
조건	<input type="checkbox"/> 가장 중요한 두 교육주체(교사/학생)의 권력 강화 <input type="checkbox"/> 민주주의와 공공성 원리에 입각하여 교육과정을 학교구성원이 통제(단, 교과내용에 대한 통제권은 일차적으로 교사 집단의 몫임.) <input type="checkbox"/> 교육노동과정에 대한 교사의 통제권 강화(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노동권 보장) <input type="checkbox"/> 복지문화공간으로서의 학교 <input type="checkbox"/> 다양한 활동을 보장해주는 사회적 교육인프라(시설, 자원, 인력)와 연계망 구축		
원리	<input type="checkbox"/> 보편성 : 기초교양중심의 일반교육 <input type="checkbox"/> 총체성 : 총체적 인간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영역의 다양화와 영역 간의 유기적 결합 <input type="checkbox"/> 공동체성과 개인성의 조화 : 개개인에 대한 실질적 배려를 가능케 하는 함께 배우고 서로를 배려하는 교육과정 구조.		

◇ 교육과정 편성 예시

단계 (이수연한)	교과교육과정						비교과교육과정			주당 시수 상한선 (주 5일 수업기준포함)	
	기초도구교과		지식교과		예술 및 노작주제교과		자치활동	사회참여, 진로 탐색활동	문화활동		
중등후기	4	4	3	4	4	4	2	3	2	2	32
중등전기	4	4	3	3	3	4	2	3	1	2	28(9)
초등후기	4	4	×	3	3	4	2	2	1	2	24(5)
초등전기	3	3	×	2	2	4	2	2	1	2	20(21)
활동	국어	수학	외국어	인문 사회	자연 과학	감수성	주제 노작	학급 활동	재량 활동	동아리 , 클럽	
유아교육	(초등 1:2학년과의 연계성 강화)										

3. 파이데이안 - 교육과정23)

	제1열	제2열	제3열
목적	조직화된 지식의 획득	지적기능들 - 학습기능들의 발달	관념들과 가치들에 대한 확장된 이해
수단	구두수업, 강의와 응답, 세가지 교과영역의 교과서와 보조재료	모형, 연습, 실제의 지도	산과술 또는 소크라테스적인 질문, 능동적인 참여
영역 작용 그리고 활동	언어, 문학과 예술, 수학과 자연과학, 역사, 지리와 사회과 과목들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계산 문제해결, 관찰, 측정, 평가, 비판적 판단의 사용	(교과서가 아닌) 책들과 예술작품에 관한 토론, 예술활동에 참여(예)음악, 연극, 시각예술
제1열의 목적	조직화된 지식, 즉 명제적 지식의 습득에 있다. 학문의 기본적인 세가지 분야, 즉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이 열에 포함시켰다.		
제2열의 목적	지적 기능들, 즉 학습 기능들의 발달에 두고 있다. 이것들은 방법적 지식에 관한 것들로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관찰, 측정, 평가 및 계산의 기능들이다. 이러한 기능들은 진공 상태에서 습득될 수 없는 것이어서 제 1열에 있는 교과목의 세가지 기본 영역들의 공부에서 연습되어야 한다. 이것들은 교양적인 기술들이다.		
제3열의 목적	관념들과 가치들에 대한 확장된 이해에 두고 있다. 제3열에 있는 모든 것은 혁신적이다. 예)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작품들을 보고 듣고 논의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 모든 아동은 이런 유쾌한 경험을 가져야만 한다. 현재 결여되어 있는 세미나 방법을 통해 민주주의에 관한 고전적 문헌을 읽고 토론한다. 그들은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 자유, 평등, 정의, 권리, 재산, 입헌 정부, 시민성, 민주주의와 같은 개념들의 이해가 일어날 것으로 보였다. 학생들의 도덕 교육에 대해서는 학교가 도덕적 규칙에 따라 잘 운영되면 그 속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도덕 규칙들에 입문될 것으로 보였다. 기본적인 도덕 관념들과 가치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도덕 문제에 대한 토론도 요구된다. 이 요구는 제3열의 교수법을 사용함으로써 충족되어질 것이다.		

파이데이안은 현재 교육과정이 제1열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 아이들은 지식을 암기하고 금새 잊어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학습기능이 상실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토론과 표현중심의 예술활동이 부재함으로써 지식을 내재화하지 못하고 있다. 파이데이안이 제시하고 있는 1열, 2열, 3열은 분리된 과정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혁신적인 3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3열은 다른 열들에서 성취된 학습을 보완하고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3열은 '토론'과 '예술활동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토론이 없다면 그들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암기하는 기계가 될 것이라고 파이데이안은 경고하고 있다.

23) "이 도식은 세가지 서로 구별되는 교육내용, 교수방법, 학습방법을 세 열로 표시하고 있다." 파이데이안 제안, M. J. Adler, 1993

현재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도 지식의 실질적인 내재화 과정인 3열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제시하는 '생활교육과정'은 파이데이안이 제안하고 있는 3열 과정의 많은 부분을 흡수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교육과정안에서 체계적으로 조직된 문화예술활동과 자치활동은 '여러 문제들'에 대해 스스로 문제제기 하고, 자기의 논리를 갖고 관점을 변호하고 반대 의견을 이해하고 대안들을 검토해 보는 학습활동을 지지하며, 예술활동을 직접 참여함으로써 감수성, 상상력, 창의력, 기획력, 반성적 판단력등 문화적 리터러시가 가능할 것이다.

VII. 학생생활운동가들이 해야 할 일

1. 비교과활동의 교육과정 연구

일단 그 간의 실천을 종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학급운영, 학생자치활동, 문화활동, 동아리활동 등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배워나가는 다양한 실천들을 종합해야 한다.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서는 타인의 사례가 매우 중요하며 통일적인 편성보다는 다양한 활동이 제시되고 활동을 위한 지원방안을 산출해 내야 한다.

주제교육이라 불리는 인권교육, 환경생태교육, 노동교육, 보건교육 등은 지식의 위계에 바탕을 둔 교과라기 보다는 실천적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 인권의식은 프로그램만을 통해서 는 배울 수 없고 특히나 인권의 소중함에 대한 강연을 통해 생기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스스로의 실천이 필요하다. 이런 주제들에 대한 고민을 갖고 학생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집중이수제 또는 프로젝트 수업 등을 연구해 볼 수 있다.

2. 교과 교육과정 연구

교과 교육과정은 정형화 된 틀을 갖고 있다. 교과는 다양하게 해석되지만 긍정적으로는 체계화 된 지식의 분야로 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는 고등교육의 학문권력에 종속된 분류체계로 보기도 한다. 여하간 교과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는데 최근엔 정보교육같은 컴퓨터관련 분야가 교과로 편성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교과를 광역화해 범교과화 하고 있으며 나라마다 여러 가지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PISA, TIMSS 등 세계 수준의 평가체제의 도입은 교과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교과의 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양과 수준의 적정화가 가장 큰 쟁점이고 그 다음 범교과화가 있다.

생활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앞의 두 주제는 매우 중요하다. 화석화 된

지식이 들어서 있는 자리에 지식과 삶을 통합시키는 활동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과교육과정에서 생활교육과정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먼저 내용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누누이 강조되는 얘기이지만 지식이 세계를 바꾸는 것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 작은 세계인 나부터 큰 세계인 구조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세계관을 교과 지식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지식에 대한 교육이 내 삶과 사회적 삶에 대한 해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방법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수업이론에서 최근 생활교육과정의 실현을 위해 대두되는 것은 협동학습이다. 협동학습은 '나의 성공이 너의 성공이고, 너의 성공이 나의 성공인 것'으로 긍정적인 상호 관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협동학습 구조는 학습자 상호간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습자가 협동을 하여 공동의 학습 목표를 이루는 구조이다. 이를 위하여 전체 학습 집단 안에 모둠을 조직하고 모둠 구성원간, 모둠간의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협동 방식은 소그룹 구성원들간의 내부적 협동을 강조할 수 있고 전체 학습 집단 내에 속한 소그룹들끼리 협동하여 학습 목표를 이룰 수 있다. 특히 협동학습은 학습 능력이 각기 다른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공동의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학습하는 교수 전략이다. 즉 삶의 관계가 교수-학습방법의 기본원리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생활교육과정을 가동할 수 있는 학교체제를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프레네 학교가 그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모든 교육내용을 삶에서 출발하고 아침마다 모듬회의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 참여하며, 자유 작업 시간과 자유선택 학습은 아이들의 체험과 질문에서 시작한다. 현실에 발 딛고 출발해 주도권, 예측불허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기르기, 공동학습능력 개발, 비판력, 책임 나누기, 상호협조, 협동, 인격발달, 공정한 분배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 왔던 교육이 어떤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학교와 아이들의 생활환경 사이의 관계 맺기를 중요시 하는 교육의 현재진행형이 프레네학교에 있다.

VIII. 생활교육과정을 현실의 교육과정으로 만들기

별써 8차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7차 교육과정 투쟁을 통해 최초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넘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다. 하지만 아직 새로운 교육과정 구상을 완성하진 못했다. 일단 범국민교육연대를 중심으로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만약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가 가능하다면 사회의 각 주체들이 교육과정에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생활교육과정은 그 한축의 문제제기이자 우리 공교육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내놓는 것이다. 물론 소수 관료와 연구자가 교육과정을 독점한다면 그 대항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날이 무디다. 그것은 아직 이론적 취약함속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교현장의 고민이 덜 담겨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생활교육과정을 현실의 교육과정으로 만들기 위한 학생생활일꾼들의 실천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